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6~2030) 수립을 위한

권역별 지역문화 토론회

강원 / 충청권

PROGRAM

프로그램

강원 / 충청권

2025. 11. 20. 목요일 14:00 - 16:30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13:30 접 수

14:00 개 회

14:10 발 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추진과제(안)

발 제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14:40 토 론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제언

좌 장 김세훈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토 론 이재민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박철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신재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노재정 문화예술교육연구소 ACE VENTURA 대표

이영주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도시재생자원센터장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15:30 종합토론

CONTENTS

목차

발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6~2030) 수립 방향(안)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008
토론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제언	
이재민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046
박철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050
신재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054
노재정	문화예술교육연구소 ACE VENTURA 대표	058
이영주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062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066



발제안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6~2030) 수립 방향(안)”**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권역별 지역문화토론회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6~2030) 수립 방향(안)

2025.11.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본 자료는 연구진이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향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목차

01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수립과정

0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03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04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05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안)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개요 및 수립과정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개요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개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개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과정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균형발전·생활문화 분과위원회	문화인력·자원 분과위원회	문화도시·로컬비즈니스 분과위원회	제도기반 분과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세훈 교수 (숙명여대)	장세길 실장 (전북연)	이병민 교수 (건국대)	서우석 교수 (서울시립대)	분과위원장 연구진 문제부
외부위원	정중은 교수 (국립부산대) 최도인 본부장 (메타기획컨설팅) 유상진 원장 (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최영주 사무처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지만 대표 (사)살지대연구소) 김시범 교수 (국립경국대)	강승진 센터장 (전 춘천문화도시센터) 이한호 대표 (주스컴퍼니) 조권능 대표 (주)지방)	라도삼 박사 (서울연구원) 염신규 소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장석류 교수 (인천대)	
지역문화진흥원	허성희 팀장	한송이 팀장	박만식 팀장	신호진 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이상열 연구위원 이슬기 부연구위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조현성 선임연구위원 노수경 부연구위원 한예리 위촉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김규원 선임연구위원 김면 연구위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노영순 선임연구위원 황아람 연구원	
문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국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개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과정 : 분과회의 및 자문회의



분과회의	균형발전·생활문화 분과위원회	문화인력·자원 분과위원회	문화도시·로컬비즈니스 분과위원회	제도기반 분과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1차	7.24(목)	7.29(화)	7.31(목)	7.28(월)	
2차	8.8(금)	8.8(금)	8.8(금)	8.11(월)	
3차	8.21(목)	8.19(화)	8.25(월)	8.25(월)	9.9(화)
4차	9.22(월)	9.19(금)	9.19(금)	9.15(월)	10.24(금)
자문회의	자문위원				
1차 (8.8)	임진아 본부장(전북문화관광재단) 최영갑 팀장 (충북문화재단)				
1차 (8.21)	김미라 문화도시센터장(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지원 본부장(충남문화관광재단) 김명재 예술교육부장(당진문화재단)				
2차 (8.25)	원도연 교수(원광대학교, 익산문화도시센터장) 이원재 집행위원장 (문화연대) 최영현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3차 (8.25)	권순석 대표(문화컨설팅 바라) 백영선 대표(플라잉웨일) 신재민 센터장(충주문화도시, 충주문화관광재단)				
4차 (9.19)	김주영 대표(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_Art, 전북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 김성하 대표(인천 서구 문화재단, 전 경기연구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 지역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초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 등 역량 강화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근거 마련('20.12) 및 3기~4기 활동('20.4~'24.7), 시·도 문화체육관광국장회의 개최('20.1),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문화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 지역문화실태조사 수시 실행, 안전·위생·방역 관리사항 포함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관리 개선)**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시·도 토론회 개최('21), 새정부 지역문화정책 토론회('23년, 4회), 일방적 계획 수립이 아닌 양방향식(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도
- **(데이터)** 지역문화현황통계 주기단축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 2020 지역문화실태조사('22),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25) 발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계획공동행 사업 추진)** 시범형 통합 보조사업 추진('21) : 인생나눔교실,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신중년문화예술교육 통합 (5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 통합공모('21년)
- **(지방이양 대응)**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 실시
- **(최소보장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역균형지원제 적용
- **(메세나)**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 : (결연) 1,374건(누적) (기업지원금) 320.3억원 (펀드교부금) 130.7억원
- **(참여예산제)** 문화도시 선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시 타부처 사업 연계 추진 배점 부여
- **(부처협력)**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특화재생사업 등 선정에 문제부 사업 연계 등
- **(인력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사업 통합공모('21년), 주관기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통합, 지역문화아카데미 온라인교육과정 개설운영('23~),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일경협) 지원('20~'24) : 누적 273명
- **(지역문화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22년 제1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지역문화재단 지식 및 성과공유 확산의 장 마련, 전국 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 출범('24.1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2027~2026) 발표 및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II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 생활문화정책의 재정비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내실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 속 문화확산을 위한 계기별 집중 프로그램 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노력,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강화 추진
-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생활문화센터 포함,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실시('20),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사업과 예술동호회 지원사업 통합 운영 ;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실시('22~'23),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실태조사 실시('23~)
- **(시설 확충)** 생활문화센터 확충('20~'22) : 누적 539개 ('23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 **(운영 내실화·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지원 ('20~'22) : 컨설팅(83회),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195명) ;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447개 프로그램), 조성 및 운영 매뉴얼 발간('21) ; ('21)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5개 지역) ('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지원(10개 지역), ('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생활문화 통합브랜드 '문득' 개발·확산
- **(생활문화 동호회·공동체 지원)**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20~'24) : 도서관(307개관), 박물관(14개관), 미술관(9개)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20~'22년 : 4,441개), 예술동호회 활동지원('21년 : 1,255개),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지원('20~'23년 : 188개),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20~'23년 : 순천, 포항, 강릉, 진주),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우수사례 공모사업('23~'24 : 6개 기관)
-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10월 <문화의 달> 행사 (파주, 충남, 밀양, 신안, 남원, 서귀포) ;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 ('20) 248개관, 30여만명 참여→ ('24년) 335개관, 85.7만명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참여시설('20년 11,904개→ '24년 21,569개), 참여프로그램 수('20년 18,499개→ '24년 23,894개)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20~'23년 : 106개 지자체),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20~'23년 : 148개 단체, 4,242개 프로그램), 지역연계 협력사업('23년 : 4개 단체, 13개 프로그램), 구석구석 문화배달('24년 : 831회, 26만명 참여), 청춘마이크('21~'24 : 1,813개팀), 실버마이크('22~'24 : 279개팀)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12개소 지정 및 개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II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무협의회의, 워크숍 등 추진
 - 예술활동준비금(舊 창작준비금) 지원('20~'24) : 106,253명, 3,068억원
 -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코로나19 특별융자 포함) : 12,699명, 1040억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0~'24) : 4,883명/ 796개 기관 (지역 : 1,915명 / 389개 기관)
 -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24년) : 21개소, 공예창작지원센터('20~'24) : 7개소
-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 71개소 지원 ('20년 14개, '21년 13개, '22년 13개, '23년 14개, '24 17개)
 - (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20~'22) : 723개관, 작은도서관 조성('20~'22) : 211개관 ※ '23~ 지방이양
 - (박물관·미술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사무 광역지자체 이양
- **(첨단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제공)** 공립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 ('20~'22) : 51개소 ※ '23년 사업종료
-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작은미술관 지원('20~'24) 35개소 지원
 - 찾아가는 박물관('20~'22) 129회, 11,100명 참여
 - 디지털 원격교육('21~'24) 147회, 4,733명 참여, 국보순회전 찾아가는 교육 12종 개발
 - 책나래 참여도서관('20~'24) : 1,166개관, 이용건수 : 185,517건, 이용자수 : 70,642명
-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포(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 무장애시설 인증 관련 배점 부여)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개선 : 안전한 시설관리 항목 신설, 연구·전시·교육 지표 질적평가 강화, 조직 및 인력관리에 전문성 강화교육 반영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개발보급 확대 : 52,985건
 - 장애인도서관 자료 표준 제정 : 한국수어영상도서관 제작지침 개정,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등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III.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존·발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및 지역N문화포털(통합자료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 및 우수문화브랜드 선정 및 시상,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매력있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지역 문화고유원형 보존지원 근거 마련(제11조의2 신설)
 - **(지역어 보전, '20~'24)** 지역어 보완조사(19지점), 세대별·성별 지역어 변이 조사(어휘표현 9지점, 구술발화 9지점), 지역어 지도 작성(155장), 지역 언어문화 발전방안 연구
 - **(지역콘텐츠 아카이브 및 디지털화)** 지방문화원 통합자료관리시스템(지역N문화) 구축 및 운영('21년~), 원천콘텐츠 및 지역 관련 정보 접근성 증진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 매년 약 1만건 향토자료디지털화 및 지역N문화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브('21~'23) : 15개 지역, 933명 구술채록
 - **(지역문화유산·미래유산 보존·활용, '20~'24)** :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217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1,612건), 국가유산 특성화 교육 운영(708회), 실감형 국가유산콘텐츠 제작(197건), 공능 활용 프로그램 확대
 - **(지역문화 브랜드화)**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20년, 3개 지자체) → 지역문화대상으로 전환('21년) → 로컬100 선정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지역문화 국제화)**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22년, '23년)
 -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거점기관 지정 및 회의체 운영
 - 창작·창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랩(15개 센터, 창업지원 1168건, 창작작 지원 15,865건), 음악창작소(17개소, 음원제작지원 1,996회, 공연지원 954회, 교육운영 6,442회), 스토리랩(스토리발굴 194건), 기업육성센터(10개 센터, 입주지원 1112개사, 제작지원 484건, 매출 7,621억원, 고용창출 5,147명), 글로벌게임센터(10개 센터, 796개사 지원, 매출 2,866억원, 고용창출 2,454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268개 과제 지원), 넥스트콘텐츠페어 개최('22년)
 - e-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 대회 74회, 참가자 17,766명, 관람객 629,465명), 콘텐츠 누리터(3개소, 프로그램 1,695회, 수혜자 37,661명 ※'23년 종료)
 - **(지역 문화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지역행사 활용 여행상품 개발(33개, ※'23년 종료) ; 관광두레 (누적 147개 지역, 998개 주민사업체 발굴) ; 지역문화 연계형 시티투어 버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IV.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공간기반형 사업 본격화 및 도시 차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의 창출,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및 문화를 통한 유휴공간의 재생 추진, 포상제도를 통한 지역 혁신의 지원,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 도모**
 - **(문화도시, '19.12~: 24개 지자체 지정)** (1차)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2차)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 완주군, 춘천시 (3차)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4차)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 **(대한민국 문화도시, '24.12.: 13개 지자체 지정)** 광역선도형 모델 ; 안성시,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전주시, 진도군, 순천시, 속초시, 충주시, 수성구, 수영구,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 **(특성화 및 협력 지원)** 지역고유문화자원 활용 특성화 사업 추진 배점 강화, 전국 문화도시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도시 간 협력 지원('21.6~), 지정도시 성과평가를 통한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서귀포, 청주, 밀양), 문화도시박람회 개최(청주,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 춘천, 영등포) 및 최우수도시 선정(원주, 서귀포, 완주)
 - **(문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문화도시 지정평가 시 행안부 리빙랩 등 타부처 사업 연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시범지 조성 21개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5종)
 - **(포상제도를 통한 혁신 견인)**
 - 문화를 통해 창의적 혁신 지자체 선정·시상하는 '지역문화대상('21~'22)' : 서울 서초구, 시흥, 청양, 광주 동구
 - 지역문화자원 포상('23~'24) : 진주남강유등축제, 하회마을, 성심당, 춘천마임축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구 중구
 - **(문화지구 개선)** 문화지구 내 업종제한 존치 관련 지자체 의견 조화 및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 확대(시행령 개정 제16조1항. '24.3.)
 - **(문화취약지역)** 문화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 : 문화취약지역 기준개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근거 마련(제6조1항)
 -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 신규사업 추진('22) : 활력촉진 지원 및 지역활력 문화공연 17개 지자체
 -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 등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추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한계 및 지역의 애로사항

I.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관리체계 부재, 문체부 타 기본계획과의 정책적 연계성 취약
-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집행체계로, 지역문화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필요
- 위원회제도의 형식적 운영, 시민 참여를 위한 실질적 구조 취약
- 지방이양 가속화(국비지원 감소)로 지역문화예산 감소, 지역간 문화재정격차 확대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세부사업별로 교부되어 지자체의 자체 기획·집행을 위한 재량권 제한, 지역특성을 살린 중장기 사업설계의 어려움
-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중단 등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
- 지역문화진흥기금 활성화 미흡
- 기초문화재단의 운영기반 취약
- 지역에서 문화전문인력의 부족 현상과 지역매개인력의 소외 여전
-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로 지역 전문인력의 발굴양성 어려움
- 전문인력 양성 이후의 배치나 성장,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 취약

II.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생활문화지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지역 이관으로 예산 삭감, 인력 축소, 실질적 사업 운영 난관
- 지역별 사업의지 및 문화적 역량에 따라 격차 확대
-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 미흡
- 지역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전략 모색 필요
- 하드웨어 조성 이후 지자체 재정력만으로는 초창기 운영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필요
- 농어촌지역의 문화시설 접근성, 교통접근성 여전히 취약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개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한계 및 지역의 애로사항

III.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 지역마다 유사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활용이 많아 획일화 현상 여전
- 기존 우수자원 외에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지역자산에 대한 투자 미흡
- 관광 이전에 콘텐츠 기획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확대 필요
- 문화자원 아카이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미흡
- AI 시대에의 대응한 지역문화전략 마련 미진
- 지역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미흡
- 로컬문화비즈니스 활성화에서 문체부의 역할과 주도성 한계

IV.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문화도시, 대한민국문화도시를 둘러싼 지자체 경쟁 과열
- 정부기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방향의 변경으로 정책현장의 혼란 및 성과 지속발전에 어려움 발생
- 문화도시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부재
- 지역간, 지역내 인프라·인력자원·향유기회 등의 문화격차와 불균형 여전
- 사회문제와 연계한 접근 미흡
-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질적 성과나 문화적 역량 강화에 한계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취약
- 인구감소지역,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
- 더 작은 생활권 단위(읍면 단위) 사업 마련 필요
- 중앙 차원에서 지자체 간 교류를 주도·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제2차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의 주요 성과와 한계

서울	• (성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정, 예술교육센터 건립, 예술창작활동 기반 마련, 공예, 사진박물관 등 테마형 박물관 건립 등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한계) 사업 근거 지원 조례 폐지, 예산 삭감 등으로 당초 계획 추진 곤란
부산	• (성과)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지역문화자산 발굴 기여,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창작공간 두구 등)을 통한 창작 환경 개선 • (한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국회 계류로 북항 문화자유구역 조성 어려움 봉착
대구	• (성과)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브랜딩 강화,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 (한계) 운영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질적 내실화에 한계,
인천	• (성과) 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 지역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스마트 MICE산업 특성화 • (한계) 문화자치기반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의 한계, 문화재생 및 문화도시정책의 지역편차 지속, 예술인 창작·주거안정정책의 실행력 부족
광주	• (성과) 지역문화특성화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향상,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전략, 광주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출범, 시·자치구·마을 단위 프로젝트 추진, 디어마이광주 문화예술통합플랫폼, 광주문화관, 회경루, 신창동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광주이스포츠경기장, 실감콘텐츠큐브 구축, 광주문화기관(17개) 협의회 공동사업 발굴 • (한계) 국비예산사업 삭감으로 사업 기반 약화, 재정적 한계로 지역 특화형 길러 콘텐츠 발굴 어려움, 청년예술인 유출방지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개선 필요
대전	• (성과)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정다운 버스킹, 대전유스아트페어 개최로 청년예술인 기회제공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확산,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개최 등 정책 공론장 마련,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문화인력 양성 • (한계)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울산	• (성과) 시민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법정문화도시 선정, 청년주도형 프로젝트, 창작준비금 이자지원 등 예술인 지원 강화, 울산박물관 산업사실 리모델링,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조례 개정, 위원회 설치, 문화재단 개편 등 • (한계) 전략 간 추진 편차, 질적 성과 분석 부족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제2차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의 주요 성과와 한계

세종	• (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유희공간 연계한 문화공간 확대, 구도심 문화재생, 시민대상 문화교육 확대로 지역문화인력양성,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체계 구축, 세종의 문화도시 정체성 브랜드화, 세종호수공원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구축 • (한계) 문화기반시설 지역 편중, 통합적 운영체계 부족, 성과관리체계 및 예산·인력 부족으로 일부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곤란
경기	• (성과)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문화자치활성화 시군 공모사업, 경기시민 예술학교 운영, 장애인 문화창작환경 조성, 도내 청년예술인 및 문화예술인 관련 조례 제정(2건), 기초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조례 제정(3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유희·폐공간 문화재생, 지붕없는 박물관 활동 공간 운영,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 (한계) 실행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및 중간점검 미흡, 질적 내실을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 설정 필요
강원	• (성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공박물관·미술관·영화관 건립 및 활성화 지원, 문화환경취약지역 대상 신규사업 적극 추진으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강원 대표 음악제영화제·글로벌화 추진, 문화도시 조성, 청년 문화인력 양성 및 참여프로그램 확대, 강원 문화예술 온라인 통합채널 운영 • (한계) 2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정책방향성 모호로 효과적 추진 곤란, 국비사업 지방이양으로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발굴 필요, 시·군 간 예술인 등 문화격차
전남	• (성과) 문화융성극 신설, 전남도립미술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 기반시설 확충,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 문화재단 신설(4개), 문화도시 신규지정(3개),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발전특구 지정(순천), 지역인재 육성 등 • (한계) COVID-19로 문화예술분야 위축, 지역소멸 위기, 지역간 문화인프라·향유기회 불균형 지속
경북	• (성과) 전통문화유산의 활용, 지역문화 가치발굴, 생활권별 신도시사업 개발, 문화관광사업 기반조성,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기회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특화된 지역문화자원 발굴 등 • (한계) 지역 여건 상 인적자원 활용 등 어려움, 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경남	• (성과)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창작여건 조성, 문화교류 및 대표문화 브랜드화,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산업 분야 기반 구축, 문화시설 조성 및 생활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주민주도형 사업발굴 및 취약지역 프로그램 지원 • (한계) 도시, 군 지역 간 문화격차 상존, 문화재정 및 거버넌스 역량 미흡
제주	• (성과) 지역문화인력양성사업,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조사 실시, 문화소외계층사업, 예술인 복지기금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간 교류, UCLG, 서귀포문화도시 선정 등 제주문화 브랜드 세계화 노련 • (한계) 문화예술 주체의 정책참여 기회 부족,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수요충족 어려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와 한계

3차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지방이양 이후에도 의미있는 문화사업이 유지 및 확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중요성 인식 및 체감도 제고, 추진·이행 실적의 체계적 관리 필요, 성과관리체계 구축, 다른 중장기계획(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국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계획, 지역의 자율성과 재량권 존중,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방향이 모색될 필요
- 지역별 문화 격차(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를 고려한 차별화 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문화정책에 대한 컨설팅 및 문화 재정 지원 필요
- 하드웨어 조성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만으로 초창기 운영 및 정착에 종종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 필요
- 문화 협치를 위한 총괄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역할 강화 필요
- 문화취약지역 우선 지원 또는 확대 방안 등 마련
- 인구소멸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향유 방식 변화를 반영해 시니어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충 확대할 필요
- 중앙 차원에서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에 유의미하게 활용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표 개선과 데이터 입력 관련 기초지자체 교육 실시 필요, 지자체에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통계, 실태조사 결과 등 지원(공유) 필요
- 보다 확대된 범위의 지역문화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필요, 지역문화 전문인력(기획자, 매개자, 연구자) 양성·순환 배치 제도화, 청년 문화인력과 연계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지원, 양성고 배치뿐만 아니라 역량별 맞춤형 교육, 전문인력의 커리어 지속을 위한 사업 연계, 일자리 질 개선과 같은 부분들이 같이 고려될 필요.정부주도의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필요
-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참여확산, 만족도 제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략적 추진과제 설정 필요
-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신중년, 신노년, 1인가구 증가 등), AI 대전환 등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생활문화정책을 넘어 온·오프라인 방식, 참여 계층의 다양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 및 박람회 순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생활문화권 단위(읍·면·동)까지 고려하는 프로그램(농촌·도시지역 맞춤형 문화서비스 모델 제시 등) 설계 필요
- K-컬처의 국가산업화 전략에 대응하여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과 콘텐츠화, 관광산업 발전 지원하는 과제가 더욱 다양하고 섬세하게 설계될 필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거시적 환경변화와 지역문화정책의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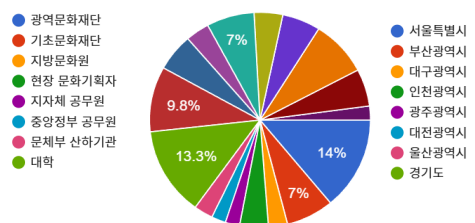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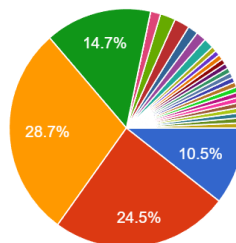
	환경변화	영향	대응방향
Social	-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 이주배경주민 확대 - 주4.5일제 도입 - 사회갈등 및 고립 심화 - K-컬처의 위상 제고	- 지역 활력 저하 -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상실 - 사회적 비용/돌봄부담 확대 - 문화향유 수요 확대 및 다변화 - 연결과 치유에 대한 수요 확대	- 지역의 문화적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유입 확대) - 지역의 고유한 기억과 서사, 문화의 발굴.보존.활용 촉진 - 창조적 커뮤니티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 확대 - 지역문제해결형 문화정책 확대
Technology	- 디지털 기술심화 - AI 대전환(AI)	- 스마트도시 도래 - 지역문화생태계 가치사슬 변화 - 디지털격차/AI 편향 확대 - 빅데이터의 중요성 확대	- 문화인프라/서비스 스마트화 - 디지털/AI 리터러시 제고 및 윤리규범 확대 - 지역문화자원의 디지털화 및 AI 통한 다각적 활용 - 창의력/상상력/성찰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Economy	- 저성장과 신보호주의 - 긴축재정 -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감소	- 지역소득 및 일자리 감소 - 문화 분야 지원 감소	- 지역 내 문화 분야 일자리/일거리/일경험 창출 - 지역 내 로컬문화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 로컬 브랜드 생태계 구축 지원
Environmental	- 기후위기 심화 - ESG 경영 확대	- 자연재해로 문화시설/축제/행사 피해 - 환경/생태/기후정의 연계 문화활동 확대	-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 분야 피해 회복 방안 모색 - 문화 분야 탄소중립 대응방안 모색 - 기후위기 실천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 지원
Political	- 이재명 정부 출범 -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확대 - 글로벌사우스의 부상	5극 3특 중심 지역발전 - 지역 간 문화재정 투입 격차 확대로 문화적 불균형 확대 우려	5극 3특 구현과 연계한 지역문화정책 방향성 제시 - 중앙-지역 간 역할분담, 거버넌스의 재정립 -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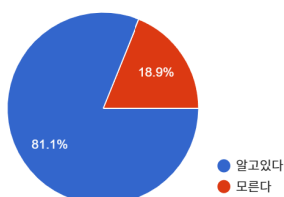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분석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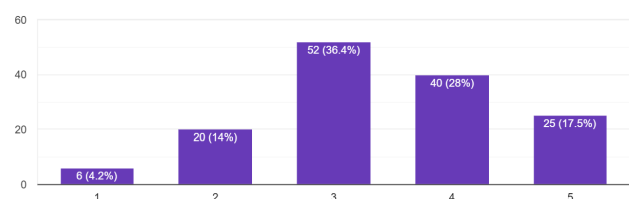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역문화정책 담당자, 지역문화재단 및 지방문화원 종사자, 학계 전문가, 지역문화 현장 종사자 등 (응답자 : 144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5.1.27~2025.11.8
- 응답자 : 144명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24.3% 지방문화원 28.4%)



(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81.1%



(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 3.41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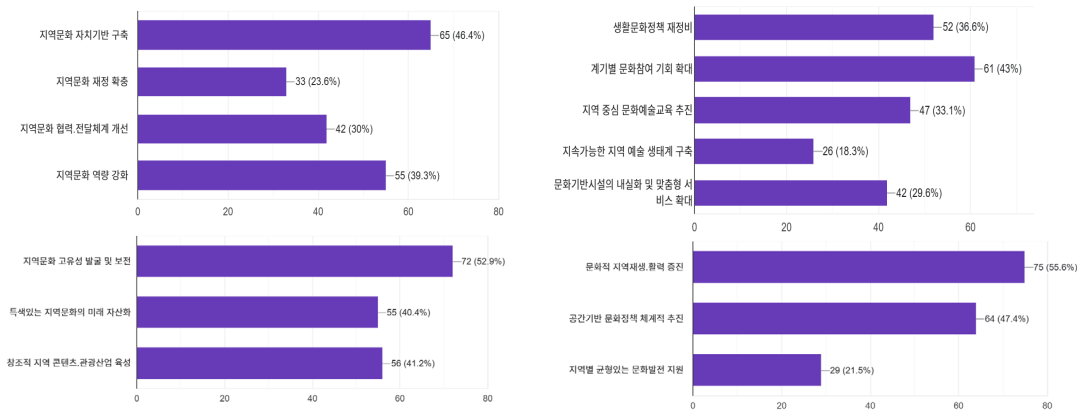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과제 (복수선택)

전략	전략명	상위 유의미 성과 (Top 2)	
전략 1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46.4%)	2. 지역문화 역량 강화 (39.3%)
전략 2	누구나 누리는 문화가치 확산	1.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43%)	2. 생활문화정책 재정비 (36.3%)
전략 3	지역문화 고유 자산의 매력 제고	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 (52.9%)	2.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41.2%)
전략 4	문화로 실현하는 균형발전	1.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55.6%)	2.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47.4%)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아쉬웠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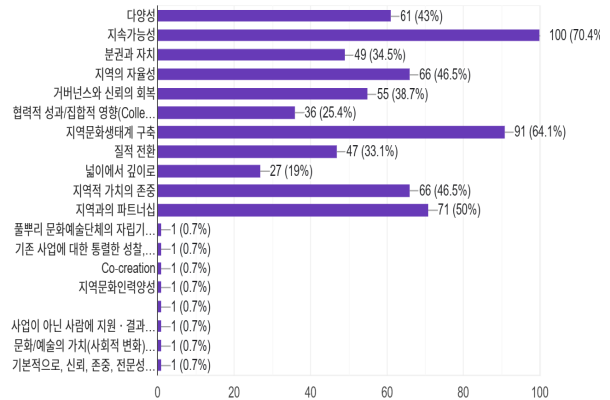
주요 주제	핵심 키워드	주요 의견 요약
재정 및 지원 시스템	재정, 예산, 확충, 지원	- 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규모가 여전히 부족 - 지원 방식이 획일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 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 미흡
생태계 및 인력 기반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 - 특히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못함
정책의 지역 적합성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	- 지역의 고유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주도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맞춤형 정책이 부족 - 특히 콘텐츠 육성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미흡
제도 및 거버넌스	특별법, 문화도시	- 문화도시와 같은 대형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 - 법제도 및 기초 데이터 등 지역 문화자치 기반 자체가 미흡하여 정책의 실효성 담보가 어려웠음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이 지향해야 할 가치(복수선택)

순위	가치	응답 수 (N=144)	비율(%)
1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100	69.4
2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91	63.2
3	지역과의 파트너십	71	49.3
4	지역적 가치의 존중	66	45.8
5	지역의 자율성	66	45.8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6)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향해야 할 비전 키워드

- ✓ 지속가능성
- ✓ 다양성
- ✓ 자율성
- ✓ 협력
- ✓ 문화생태계
- ✓ 문화도시
- ✓ 포용
- ✓ 성장
- ✓ 연계/연결/소통
- ✓ 상생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7)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 (복수선택)

핵심 방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① 지역문화재정 확충 (60.7%) ② 중앙-광역-지역 간 역할분담 (51.4%) ③ 지역간, 민관, 지역-산업-학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47.1%) ④ 지역문화진흥기관 간 역할 명확화 및 협력망 구축 / 지역문화기관의 전문성 존중 및 자율성 확대 (45%) 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확보 (38.6%) ⑥ 지역문화 관련 조사, 연구, 빅데이터 생산·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 문화행정 쇄신 (35%) ⑦ 지역문화공문장을 통한 소통 확대 /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개선 (32.9%) ⑧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강화 (22.9%) 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체계의 변화 (22.1%) ⑩ 문화 분야 협약제도의 도입 (19.3%)
II.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① 취약지역 문화적 정주환경 형성: 문화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47.9%) ② 문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44.3%) ③ 지역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아지트 만들기 (43.6%) ④ 지역맞춤 협약형 문화도시로 전환 (40.7%) ⑤ 지속가능한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마을 단위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39.3%) ⑥ 빈집, 폐교 등 지역유휴공간을 문화로 살리기 (38.6%) ⑦ 근현대 문화자산과 미래유산에 대한 문화적 활용계획 수립(33.6%) ⑧ 문화를 통한 지역브랜딩,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고유한 디자인 경관(Design Scape) 만들기 (32.9%) 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32.1%) ⑩ 기 졸업 문화도시에 대한 인증제 도입 (21.4%) ⑪ 5극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 구축 (20%) ⑫ 야간문화(Culture After Dark) 활성화로 24시간 문화로 즐거운 지역 만들기 (17.9%)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8)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 (복수선택)

핵심 방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III. 다양성의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① 문화, 교육, 복지 플랫폼으로 문화시설의 기능 확장 (62.4%) ② 지역 내 문화다양성 증진 (53.9%) ③ 문화를 통한 치유와 돌봄 확대(창조적 공동체 돌봄, Creative Community Care) (47.5%) ④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39%) ⑤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36.2%) ⑥ AI와의 결합으로 문화시설 등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확장 (35.5%) ⑦ 디지털·AI 격차 해소와 윤리규범 확립 (25.5%)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①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62.9%) ②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57.1%) ③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56.4%) ④ 지역문화인력의 일 경험 확대와 성장경로 지원 (51.4%) ⑤ 로컬에서 글로벌(Glocal)로 지역문화 무대의 확장 (32.9%) ⑥ AI 시대에 적합한 지역의 기억과 서사의 보존 (25%)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9)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주요 제언

- 중앙-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 소통·연계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 상호성있는 협력 체계 구축
- 중앙 주도의 통제와 간섭을 줄이고, 지역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하는 문화자치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기초 지자체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
- 협치 기반 시민참여 구조 제도와, 현장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의 보장

- 지역 문화기관의 전문성 존중 및 자율성 확대
- 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 및 사업운영 시 정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문화예산의 확장
- 지역문화기관 복지, 처우개선

- 인재를 키우는 지역 사업
- 문화인력 양성 교육
- 예술인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문화로 돈 벌기 자립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지역맞춤형 정책 필요
- 문화다양성 확장
- AI시대에 적합한 지역문화정책, 디지털 전환과 문화기술 대응
-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 문화교육과 시민문화역량강화
- 생활권 단위의 문화정책 실행 주체로 주민 밀착형 사업
- 지역간 연대와 국제교류
- 연령별 문화 접근성 어려움 해소, 중장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안)

※ 본 자료는 연구진이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향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비전과 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문화, 함께 커가는 지역			
가치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생태계, 파트너십, 자율성, 다양성, 포용성, 로컬리티			
목표	(국정과제 목표) 국민 문화예술관람률 제고 ('24년 63% → '30년 70%) (신규) 지역주민 문화적 정주환경 만족도 제고 ('30년 60점) (기존) 지자체 문화재정 비율 ('24년 1.8% → '30년 1.9%) (신규)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24년 15.2분 → '30년 13분)			
추진 전략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전략 재구축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추진전략과 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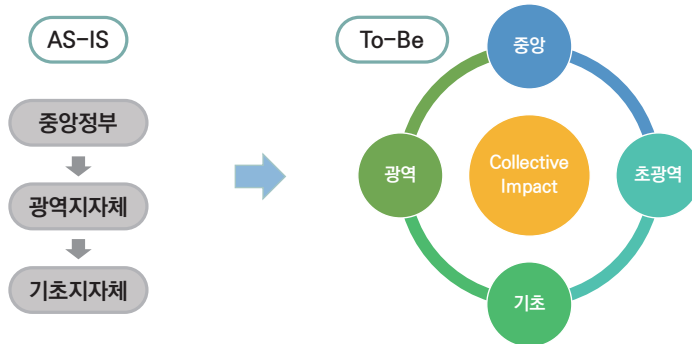
추진전략		정책과제 (21개)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1.1. 지역문화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한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 1.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제고 및 법·제도 정비 1.3. 지역문화 재정 확충 1.4. 조사·연구·빅데이터 생산·공유시스템 구축 1.5. 지역문화행정 혁신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전략 재구축	2.1. 5극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 구축 2.2. 문화도시 NEXT : 지역맞춤 협약형 문화도시로 전환 2.3. 문화마을·문화지구 활성화 2.4. 새로운 로컬씬(Local Scene), 문화경관 만들기 2.5. 취약지역 문화적 정주환경 형성 : 문화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3.1. 생활문화 시즌2 : 문화를 통한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로 확장 3.2. 지역 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 3.3. AI 대전환(AI)을 통한 문화시설 등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확장 3.4. 지역·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디지털·AI 격차 해소와 윤리규범 확립 3.5.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기후 실천 프로젝트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4.1. 지역문화의 체인저(Changer),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4.2. 지역문화인력의 일 경험 확대 및 성장경로 지원 4.3. AI 시대, 지역의 기억과 서사의 보존 4.4.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4.5.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4.6. 로컬에서 글로벌(Glocal)로, 지역문화 무대의 확장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1 지역문화 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한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

1 중앙-초광역-광역-기초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 재정 이양에 따라 이전의 하향식 사업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여러 영역 간, 여러 지역 간, 상이한 지역수준 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증대
- 풍부한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을 위한 다수준, 다주체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
 - 국가, 시장,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메타 거버넌스를 다수준, 다공간 차원에서 구성
 - 장기적으로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과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구성



중앙정부	· 문화기본권 확보를 위한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보장 · 법·제도 기반 마련 · 선도적 정책개발 및 추진 · 전국 단위 DB 시스템 구축, 조사·평가 등
초광역	· 초광역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공동 의제 발굴 및 공동대응, 협업 사업 추진 · 인력 교류 ※ 5급3특 초광역 문화정책 실무협의체 구성 ※ 5급3특 초광역 단위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	· 중앙-기초 간 매개·조정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허브 역할 · 광역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특화 사업 발굴 ·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문화격차 완화 · 문화자원 연계 · 지역문화환경 조사
기초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자원 발굴·양성 · 기초권역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밀착형 생활권 문화정책 추진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1 지역문화 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한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

2 중앙-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확대 운영

- 중앙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명확화 및 실질화 : 중앙-광역-기초, 민-관 사이의 개방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
 - 정부위원 외 민간위원 유지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 비율 균형 유지, 분기별 회의 정례화,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도진흥계획'의 검토·심의, 1년 단위 추진실적 검토 및 평가, 주요 현안 검토·심의
- 지자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확대 및 기능 실질화
 - 광역 단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1년 단위 활동·심의·제안 내용을 중앙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보고, 지자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간 공문장 정례화
 - 기초 단위 <시·군·구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단계적 확대 유도

3 지역문화진흥원 기능 재구조화 및 역할 강화

- 중앙정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벗어나, '지역 주도의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분야 간 협업' 등을 수행하는 '촉매자'이자 '전략적 지원자'로의 전환
- 지역문화진흥원의 법적 지위 확보와 통합 지원 허브로의 기능 재구조화

4 정례적 문화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한 소통 확대

-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동"
- 결정보다는 결정 과정을 설계,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이 아닌 협력체계에서 매개 역할, 지역에서 수렴된 타운홀 결과를 보고하고 반영

5 문화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문화 가치의 확산

- 대상 명확화 및 범위 확대, 권역별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실효성 제고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제고 및 법·제도 정비

1 지역자율형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체계 형성 및 모니터링·포상체계 마련

✓ 각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관리체계 형성

- 2030년 제4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모든 광역지자체 대상 <시·도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조례 제정 유도) (기초지자체 - 권장)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각 광역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관련 사항 및 해당 지자체의 문화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립 → 수립과 동시에 문체부에 계획 제출
 - 1년 단위로 “기본계획 및 진흥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중앙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송부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시행·관리
 - 문체부가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계획 종료 1년 전 수립 완료, 각 지자체는 문체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문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
 - ※ 제4차 기본계획(2031~2035)의 경우 문체부 202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30년 각 지자체 문화계획 수립 완료 → 2031년 계획 운영
 - 지역문화진흥 내 컨설팅단을 운영, 각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문화대상> 등 기존 수상제도를 개선, 우수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시행
- 우수한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설계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3 지역문화 재정 확충

-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20~2023년 사이에 지방이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규모는 약 8,815억원, 이중 ‘문화예술분야’ 사업 예산 규모는 약 4,068억원
- 2024~2025년에는 ‘지역문화진흥’ 및 ‘국민문화활동지원’ 관련 사업이 일부 종료되거나 지특회계로 이관되는 등 재구조화
- 2025년 기준 지자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세출예산(순계)’은 15조 6,220억원(4.8%), 이중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5조 3,691억원(1.6%)을 차지
-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예산 중 국비는 1조 7,652억원(11.3%), ‘문화예술 부문’ 국비는 4,741억원(8.8%)에 불과 (시도비 37.9%, 시군구비 53.3%)

1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된 문화분야 특수목적재원인 ‘지역문화진흥기금(현재 법정재량기금)’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25년 기준) 24개 지자체, 1,582억원 조성, 전체 지자체 조성 기금액의 0.3%에 불과 ; (‘20년) 39개 지자체 → (‘23년) 31개 → (‘25년) 24개
 -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 지역문화 재원의 다각화

[사례] : 영국 Cultural Impact Fund,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새싹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

- (민간기부 활성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일반기부단체(舊 지정기부단체) →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단체(舊 법정기부단체)로 전환 검토
 - (단기적) 인구감소지역, 문화취약지역 기관’들에 한정하여 기부금 공제한도 상향조정 적극 도입 검토 (도입 효과성 검증 후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사업 활성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역문화 프로젝트 특화형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 (SIB, Social Impact Bond) 민간이 선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약속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만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
 -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 문화 분야 지정기부사업’ 발굴 및 모금 확대, 문체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홍보 추진하고 정부지원(정액보조지원) 적극 검토 [사례] 광주광역시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전남 담양군의 ‘어르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 (균특회계 초광역특별계정 활용) 초광역 단위로 지역 연계형 문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연계형 문화클러스터’ 발굴 추진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3 지역문화 재정 확충

3 지역문화 내실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

- 지역이양사업(전환사업)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
 - (문화 분야 맞춤형 성과지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전환사업 성과평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행안부 성과평가기준에 반영 추진)
 - (지역문화사업 컨설팅) 지방이양된 지자체 보조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구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추진(전문 컨설팅단 구성·운영 검토)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문화사업 내실화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총 2,109개이며, 이 중 문화·관광은 464개(22.0%)로 산업·일자리분야(484개, 23.0%)에 이어 두 번째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체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이들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
 - (기획-컨설팅 강화) 행안부-관계부처 공동으로 ‘투자계획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운영하고, 사업 본격 추진 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적 지원 추진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자체서 既추진 중인 문체부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연계 유도
 - (성과관리)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사업 개선 유도
- ‘문화 환경 취약지역’ 지원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4 조사·연구·빅데이터 생산·공유시스템 구축

1 지역문화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 한국문화정보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역문화진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확충
-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발굴된 분석 사례와 활용사례의 현장 전파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실무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전파

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지자체 관점에서 개별 지자체의 문화정보를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4 지역문화실태 심층연구

- 생활권(읍·면·동) 단위 문화 실태 분석 및 심층연구
- 지역문화조사 등 주민 삶의 질·공동체 의식·여가생활 만족도를 묻는 정기적 조사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행정자료 연계·분석
- 지역사회조사의 문화·여가 문화 연계 방안 검토

2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통계생산 및 공유체계 개선

-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및 자료 다각화로 지표측정의 타당성 및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정 부담 경감
- 지역 주민의 행동지표와 인식지표를 측정하는 문화 관련 항목을 표준화하여 포함시켜서 지역문화환경에 대한 주민 체감도 반응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자료 활용
- 개별 지자체별로 조사 결과 전체 분포에서 해당 지자체의 포지셔닝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및 개선 방안 컨설팅



I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5 지역문화행정 혁신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5 지역문화기관 전문성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 확대

- **(단체장 역량·성과평가 모델 개발)** 지역문화기관 단체장 선임과 성과평가에 활용되도록 '지역문화기관 기능별 단체장 핵심역량'을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 및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수요 맞춤형 직무역량교육 확대)** 수요맞춤형 직무역량교육 제공으로 지자체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과 지역문화재기관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
- **(ESG 경영 확대)** 지역문화기관 거버넌스 구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ESG 경영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6 지역 문화 분야 행정 쇄신

- **(문화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지침 개선 유도)**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 제고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회계통제 등 규정 및 지침 간소화 추진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제공
- **(공모사업 사후관리방안 모색)**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장기적으로 포괄 기획형이나 지역 통합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모사업의 경우 운영 및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지방이양 추진
- **(문화재단 경영평가의 특수성 고려)**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문화재단 경영평가 개선방안 모색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통제 개선

- **(성과평가 인식 전환)** 보조사업 평가에 관하여 정량적 평가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질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 **(자율 성과지표 도입)** 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의 일정비율을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 협력구조 안에서 문화예술 전문 분야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질적·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개발 연구)**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장기적 관점으로 관찰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정량적 산출물(output)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관계·정서를 포함한 지역사회 변화(outcome)를 종합적으로 파악
 - 정성적 성과지표 개발, 지역문화 패널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장기추적지표 개발,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종합 성과지표
- **(성과평가 방식 다각화)** 사업 추진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을 전체 주체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접근 검토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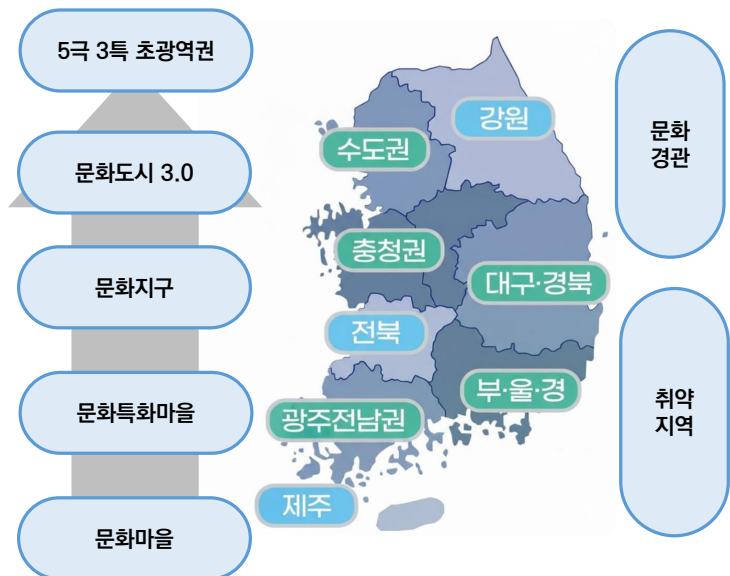
✓ 기존 지역문화 공간 정책의 한계

- 수도권 집중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미흡
- 시설 공급 위주의 전략

✓ 문화를 공동체 회복과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

✓ 다층적인 레이어(layer)를 고려한 공간 전략 추진

- ① **(초광역권)** 5국 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 구축
- ② **(기초 및 광역권)** 지역주도 맞춤형 협약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한 문화도시 3.0 추진
- ③ **(읍면동)**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문화적 역량이 스스로 자라나는 '문화마을(씨앗)',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는 '문화특화마을(성장)', 안정적인 생태계로 자리 잡는 '문화지구(생태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장인경제(Artisan Economy) 등 특화 산업과 연계
- ④ **(문화경관)** 지역의 고유한 디자인 스케이프(Design Scape) 형성을 통해 새로운 로컬씬(Local Scene)으로서의 '문화경관' 만들기
- ⑤ **(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의 문화적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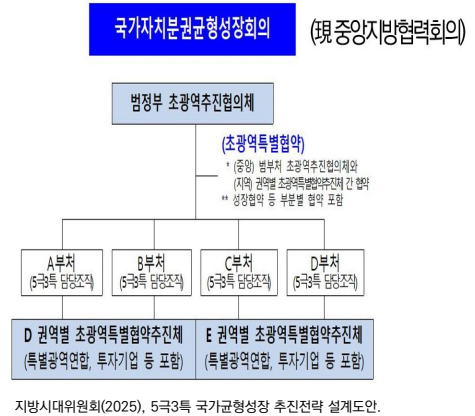
1 5극 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 구축

1 5극3특 문화권역 진흥을 위한 특례 부여 등 법·제도 마련

- 5극 3특 초광역권 문화협력 및 문화진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 추진단, 실무협의체 등 추진조직 설치, 5극3특 초광역권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2 초광역권 단위 거점 (가칭) 통합문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5극3특 문화권 조성 추진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초광역권 사업을 주도해나갈 추진체계의 중핵으로서 '가칭' 통합문화지원센터' 설립·운영
- 주요 기능(안)**
 - ① 초광역 문화권 종합계획 실행 지원
 - ② 권역별 대표 문화사업(브랜드 사업) 발굴·육성
 - ③ 문화권 연구·데이터 허브(지역문화자원 조사, 아카이브 구축)
 - ④ 권역별 국제교류 거점(해외 문화권(유럽, 아세안 등)과의 문화 협력 창구)
 - ⑤ 시범사업 추진 : 문화행정·기관·단체 중사자 공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럼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권역 아티스트·예술대학 연계 협업 프로젝트



3 국립문화시설의 분관·분원 설치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 (초광역형 분관·분원 설립) 지역에 국립문화시설 분관·분원 조성 시 해당 권역의 '랜드마크'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건인
- (국립문화예술단체 청년인턴제도 적용)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경험과 실력,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1 5극 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 구축

4 경쟁력있는 초광역 문화산업 성장전략 수립 및 대표사업 선정·지원

- (5극3특 슈퍼IP 육성 사업) 단순한 지역 콘텐츠 육성 지원을 넘어, 권역별 대표 IP(Intellectual Property)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 랜드마크를 초광역 단위에서 생성하고 이를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확장
 - 권역별 IP 발굴- IP 융복합화- IP 투자·펀드 매칭- 인재·창작 지원 -글로벌 확산 지원
- 5극 3특 초광역 콘텐츠 C&D(Connect & Development) 활성화
 - 5극 3특별로 창·제작 주체 육성 및 지역 브랜드 효과를 목표로 연간 10편 내외의 프로젝트 제작비를 지원

5 소통과 협력, 정체성 형성을 위한 '초광역단위 생활문화페스타' 개최

- (초광역단위 생활문화 교류네트워크 구축) '연결과 확산'의 '5극 3특 생활권' 전략과 연계한 8개 초광역별 생활문화 교류활동 체계와 거점 구축
- (권역 생활문화활동 지원·교류 거점 기관 선정) 8개 각 권역별 생활문화활동 지원과 교류 담당 거점 기관·시설 선정
- (초광역권 생활문화페스타 개최) 8개 초광역권별 생활문화활동 교류 증진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수 증진, 지역 소속감과 정체성 강화, 지역 고유문화 창조활동 등을 활성화
 - 매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한 권역별 역내 순회 '생활문화페스타' 개최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2 문화도시 NEXT : 지역맞춤 협약형 문화도시로 전환

1 지역주도 맞춤형 협약방식의 문화도시 추진

- **(지역 맞춤 협약방식 도입) 경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형 정책을 통해 지역에 맞춤형 정책사업으로 문화도시 추진**
 - 범부처 통합형 정책에서의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정책과 예산의 지속성, 지역개발의 통합적 성과를 유도.
 - '맞춤형', '패키지화' 그리고 '통합형' 방향을 견지하며 특히 지역과 중앙의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맞춤형 협약 방식으로 전환
 - 비전공유 →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본 문화도시 조성 방향 수립 → 중앙 매개기관 컨설팅 및 지원 → 기본 방향 합의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 → 세부사업 설정/ 재원 마련 및 배분 방안 설정, 사업방식 합의 (기간, 추진, 내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 대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 문화도시 사업 추진
- **(타부처 협업 확대) 타 부처 사업 공모 선정과정에서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 시 가점 인정 등 우대조건 부여 협의, 다부처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등**

2 Post 문화도시 : 문화도시 인증제 및 문화도시 브랜드 지원

- **(사후관리체계로서 문화도시 평가인증제 도입) 국고지원기간이 완료된 '졸업도시'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인증·공표하고, '문화도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한 인증 유예 및 취소, 재인증)** '법정 문화도시'에 적합한 조직·인력·예산·사업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도시들의 경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자격을 갖춘 도시의 경우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도시 브랜드 지원 사업) 간접적 지원을 통한 대표모델 발굴 및 범국가적 성과화 추진**
 - (컨설팅 지원) 중앙정부의 컨설팅을 통해 분야별 대표 모델 육성·발굴 지방자치 정책 지원
 - (문화도시 비엔날레 개최) 분야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치를 발굴한 대표 도시를 선정, '문화도시 비엔날레(가칭)' 개최
 - (문화도시 브랜드 국제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국제 문화도시와의 연계로 법정 문화도시 브랜드 국제화
 - (홍보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리랑방송, KTV, 해외문화홍보원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3 문화마을 · 문화지구 활성화

-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자생적 성장 모델 구축, 일상 공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마련

1 지속가능한 공동체 플랫폼으로서 문화마을 활성화 지원

- **1단계 (문화마을:씨앗)**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풀뿌리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잠재된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는 데 집중
 - 주민 주도 '마을문화계획' 수립과 문화자치 실현, 문화돌봄 및 문화안전망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씨앗 예산 지원, 마을문화지기(가칭) 발굴 및 성장 지원

2 장인경제(Artisan Economy)와 결합한 문화특화마을 지정

[사례 : 일본 오키야마현 코지마]

- **2단계 (문화특화마을:성장)** 문화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장인 경제(Artisan Economy)*** 등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결하여 문화적·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 (발굴) 마을 장인의 발굴 및 자산화 → (교류) 아티잔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 (성장) 로컬 브랜드 육성 → (지원) 빠른 실험을 돕는 마이크로 펀딩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유운영 법인 지원, 수익의 일정비율을 마을 공공 프로젝트에 재투자
 - * 장인경제 : 표준화된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고유한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 필요에 따라 기술, 경험, 재료, 네트워크 등 흩어진 자원을 유연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장인)'들이 모여 형성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경제 생태계'

3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례 : 미국 메릴랜드주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A&E Districts) 지정]

- **3단계 (문화지구:생태계)** 성장한 문화 주체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안정적인 활동 기반 제공
 - (제도혁신) 예비 문화지구 제도 도입, 지정 요건 및 권한 현실화, 법적 지원 근거 명문화
 - (인센티브 재설계) 임차인 직접 지원제도 신설, 상생협약 의무화
 - (문화자치경영 모델 도입) 자율 재원을 통한 '자치경영'(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성과 중심의 '임팩트 투자' 유치 (SIB, Social Impact Bond), 자산 관리 권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CLT, Community Land Trust) 모델 도입 지원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4 새로운 로컬씬(Local Scene), 문화경관 만들기

- 지역의 유휴 공간과 비가시적 자원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로컬씬(Local Scene) 구축, 문화경관 중심의 지역문화 확장 전략 필요

1 문화를 통한 지역브랜딩 · 장소마케팅 전략으로서 디자인 경관(Design Scene) 만들기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문화콘텐츠, 주민의 일상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매력적인 장소성'을 창출하는 종합적 전략
- 일관성 있는 비전 아래 장기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민간(NPO/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서의 접근
- 법적 근거 마련, 지역 단위 '디자인 스케이프' 전략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구성, 선도사업 지원 및 공유·확산, 부처간 협력 및 민간 투자 연계

구분	기존 접근 방식(As-Is)	디자인 스케이프 전략(To-Be)
관점과 범위	점(點) 단위 접근 • 특정 거리, 특정 마을에 한정된 사업 • 파편적이고 단절된 결과물	면(面) 단위 접근 • 장소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계획과 가이드라인 선행 • 지역적 비전 아래 시너지를 내는 높은 수준의 '문화경관' 창출
추진 방식	사업 실행 후 종료 • 단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끝내면 유지관리 부재 • 시간이 지나며 홍물화되는 문제 발생	민간 참여,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 '디자인 스케이프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적용 • 민간(기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병행
목표와 효과	환경 미화, 미관 개선 • 심미적 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미흡	전략적 '장소 브랜딩' •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접근 • 정주 가치 향상,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체감 가능한 효과 창출

2 근·현대 문화자산과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 확대

- (근·현대 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문화적 활용계획 수립) 근대형 대중행사(축제 등), 근대 공간(역·시장·공원·종교건축), 근대 예술작품(문학·음악·시각 등), 산업·도시 생활사(공장·철도·주거지 등) 등
- (미래유산의 문화적 활용 사업 지원) 근현대 시민기록 → 시민선정 미래유산 → 미래유산 문화적 활용의 모델을 마련, 시민주도의 활용 사업을 선정·지원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4 새로운 로컬씬(Local Scene), 문화경관 만들기

3 문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문화예술 기반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실행)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기획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예술인 및 지역문화기획자와 지역상권 내 상인·주민이 협력해 '문화 팝업(pop-up)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기반의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지원
 - 상권 침체의 원인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상권 특성과 수요에 맞는 콘텐츠 및 공간 기획을 통해 방문 유인 강화 및 매출 증대에 도모
 - 문화공동체 기반 상권 운영 모델 구축, 성과연동형 문화상권 지원 구조 제도화 병행

4 빈집 폐교 등 '문화로 지역 유휴공간 살리기'

- (빈집, 폐교의 문화적 활용) 빈집과 폐교 등의 물리적 재산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망 복원 및 활력 회복을 위해 주민의 문화 공유 또는 청년 창작자·기획자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교육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 유휴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활용 모델(빈집형 : 소규모 커뮤니티, 폐교형 : 복합문화거점 등) 유형화 및 공간 설계·운영 프로그램 개발

5 24시간 문화로 즐거운 지역: 야간문화(Culture After Dark) 활성화

- (24시간 문화생활권 시범지구 지정) 광역 내 핵심 거점(허브) 1곳과 주변 소도시 연계거점 2~3곳을 야간 네트워크로 묶어 동시 운영
- (야간문화-상권-관광 통합 패키지) 야간예술거리+문화야시장+야간투어 결합으로 문화접근성 확대와 상권 활성화 연계
- (지역간 순환형 프로그램 기획) 권역형 문화기획자 풀(pool)을 구축·활용해 동일 콘텐츠를 권역 내 여러 도시가 릴레이로 공유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 완화
- (공공·민간 문화공간 야간 운영 확장)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민간 소공연장·서점·갤러리 등과 야간 프로그램 연계, 유휴 상권에 '야간문화 거점' 조성
- (행·재정지원) 야간운영 표준지침(안) 제정(안전·보험·근로·소음), 야간대관료 감면 가이드 고시, 감면 대관료 차액 보전, 민간 공간 프로그램 운영료 지원 등
- (야간 맞춤형 프로그램 패키지) 주 1회 이상 정례화된 야간 문화강좌·공연·동네투어 패키지(퇴근 직후 접근 가능한 60~90분 모듈)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5 취약지역 문화적 정주환경 형성 : 문화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1 문화이장 양성 및 배치

- **(읍면 문화이장 선별)** 문화예술인·단체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활동가이자 문화활동 매개자인 '문화이장'을 선별·배치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현안의 문화적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문화이장의 날 개최)** 평생교육사의 날 기념행사처럼 문화이장이라는 전문적 문화매개인력의 위상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이장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 청년을 위한 문화아지트 지원

-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청년들의 문화아지트 조성)**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힙(Hip)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아지트' 지향
- 청년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고, 또래 등 다양한 연령층 및 계층과 교류하며 문화적 활력을 발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공간 발굴 및 조성 지원
- **(청년 주도의 문화아지트 운영)** 발굴된 문화아지트가 청년층의 특색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청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3 부처협력형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지역(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에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예술인·예술단체가 찾아가 공연이나 전시, 다양한 문화체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하여 각 부처 수요파악 및 문화예술단체 매칭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예산 활용 검토

II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5 취약지역 문화적 정주환경 형성 : 문화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4 부처협력형 직주락(職住樂) 통합지원

- **(부처협력 통합지원)** 지역의 활력 제고 및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와 공간계획에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 및 생활문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부처 협력으로 직주락(職住樂) 통합지원 추진**
- * '職(직장, 일)', '住(주거지)', '樂(여가, 즐길 거리)'가 가까운 거리 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자족도시
- **(생활권 단위 직주락 시범사업 추진)** 직주는 갖추고 있으나 락을 갖추지 못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 직주락 시범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직주락 관점에서 우선 추진 대상지를 선정하고 문화인프라 확보

5 아트케이션(Art + Vacation) 프로그램 지원

[사례] 부산 영도의 <예술 선단 X 내-일의 항해캠프>

- 청년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 평소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작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살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작업 및 네트워킹 확장 기대
-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의 지역 이전 가능성을 제고하여 지역불균형 완화 유도
-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

<표>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지원사업 내용

6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확대 추진

- '지역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문화를 접목한 공간 개선을 비롯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선도 산업단지' 확대**
- * 누적기준 : 2025년(3개소) → 2026년(6개소) → 2027년(10개소) → 2028년(13개소) → 2029년(16개소) → 2030년(19개소)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 (문화브랜딩, 랜드마크)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 청년문화센터 건립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산단 환경개선펀드	•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 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 노후산단 재생지원(용자)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1 생활문화 시즌2 : 문화를 통한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 확장

1 생활문화정책의 목표 및 범주 확장

- 우리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들이 급변하면서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양식이 빠르고 광범한 변화
- 인구감소로 인한 돌봄 부담의 상승, 사회적 고립과 갈등의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및 AI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공동체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의 역할이 요구
- 앞으로의 생활문화정책은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의 개인적 취향공동체'를 넘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고민, 문제들을 문화적 방식(Creative way)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상과 실험, 시도'를 지원하는 것, 즉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 지원 및 진흥'으로 확장될 필요
- 생활문화정책의 지향은 아마추어 예술생비자(Pro-sumer)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문화적 방식을 통해 풀어가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문화적 시민(Creative Citizen)'을 키워내고, 그들의 '문화시민권(Creative Citizenship)'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확장

2 문화동호회 등 생활문화활동 여건 제고

- 유희공간을 생활문화예술 거점으로 전환해 예술놀이와 예술경험을 확산하고, 제도 개선과 시민 주도형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실현
- (생활문화시설 공급·운영) 국가는 생활문화 향유환경의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기준을 개발·운영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적 개선
- (생활문화 라운지 조성)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예술가와 유희공간(학교, 공실 상가, 유치원, 경로당 등)을 연계해 예술 경험 놀이가 가능한 생활밀착형 창작·교류 공간으로 조성·전환
- (플랫폼 사업화)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 관련 '워크숍 콜렉션'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적 홍보와 거래
- (도시자산 공유 플랫폼) AI 기반 유희 도시자산을 창업·생활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 셰어링'*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플랫폼 개발→위커머스 육성
* 도시 자산 공유 플랫폼 '위셰어링'은 시민들이 공간·재능·경험을 공유하고 규칙을 직접 설정·기획하는 시민 주도형 플랫폼
- (생활문화예술인 활동보장 제도)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전문가 수준의 생활문화예술인이 많아진 만큼 이들 전문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 (예시) 지역 수요에 따라 전문성·경력·역량을 인정하는 생활문화예술인 또는 생활문화예술단체(동호회) 등록제 등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1 생활문화 시즌2 : 문화를 통한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 확장

3 문화를 통한 개인과 사회 치유 확대

- (치유의 패러다임 전환) 문화치유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결핍의 회복'에서 '삶의 풍요로움 증진'으로 전환
- (일상 속 생활문화를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상호돌봄 환경 구축)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 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화를 통해 주민 상호 간 돌봄 활동 증진
- (고령인구와 청년인구를 위한 마을 문화공동체 카페 운영) 인구 감소 마을의 유희시설 또는 빈집 등을 마을 주민들의 일상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운영
- (공동체로의 복귀 지원) 예술의 치유적 기능을 통해 신체·정신·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회복과 사회공동체 복귀 지원
- (복지부 통합돌봄체계와 연계) 지역 내 치유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문화치유·돌봄 매개인력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 사회서비스원 등 연계)
- (공동체와 함께) 취미를 넘어 세대·계층을 잇고 공동체 유대와 치유를 확장하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강화 → 창작 작품을 기초로 한 전국 단위 시민합창제 및 연극제

4 마을자원과 연계한 동네 단위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 (생활권 다중이용시설) 마을의 서점, 카페, 식당, 상점 등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권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사례] 춘천 도시가살롱
- (살기 좋은 생활문화마을 조성) 귀농귀촌 등 타 지역 이주민,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지역 외 유입 인구의 마을 정주 정착, 사회적 관계 형성, 교류 증진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시행 : 평생학습 프로그램, 귀농귀촌학교, 청년지원사업, 농어촌 마을 활력증진 사업 등 연계시행 [사례: 영월 삼들이 마을]
- (세대 복합 생활문화 공간 전환) 인구 감소 마을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 이용을 저하 공공시설을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인구 등 다양한 세대가 시간 또는 요일별로 각 세대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문화 시설로 전환, 운영

5 AIP 전략으로서 지역통합돌봄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AIP(Aging in Place)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

- (AIP 연계 문화서비스 발굴) 살아온 집·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려는(AIP)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발굴, 기존 자원을 활용한 제공 방안 마련
- (AIP 연계 문화서비스 제공) 복지부의 지역통합돌봄 사업, 농림부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AIP 문화케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예시) 통합돌봄 사업과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사업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동 참여 시 별도 사업비 지원, 지역 문화시설의 무상 이용, 우수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2 지역 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

1 이주배경주민과의 공생과 상호존중의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 **(이주민 문화체험관 및 문화다양성 하모니(브릿지) 프로그램)**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동포의 문화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주민 문화 체험관(가칭)’을 건립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문화다양성 하모니(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 **(동포밀집지역사 연구)** 동포밀집지역을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사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관련 연구 및 문화자원 발굴·활용 추진
- **(문화다양성 포용도시 지정)** 다민족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주민과 기존 원주민 간의 화합 프로그램, 정착지원,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배치 및 관련 교육 추진 등의 계획을 수립한 도시를 지정, 약 3년에 걸친 컨설팅 및 재정 지원
 - * (가칭) 문화다양성 포용도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없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을 제안, 개발하여 추진하는 도시
- **((가칭) 다문화교류센터 설립)** 지역 사회 전체의 문화적 창의성을 확대하고 사회통합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 기회 보장 및 다수자와의 문화 교류 거점

2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학교 밖 예술배움터’ 운영

[사례] 미국 After School Arts Programs

- **(지역문화시설 예술배움터 네트워크)** 학교 밖 지역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한 체계적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 내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학교 밖 예술배움터’로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심화·특성화 예술교육 제공
 - 시설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배움터 운영으로 학생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예술 체험 기회 제공
 - 학교-지역문화시설 간 ‘교육과정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의 확장·심화 학습 지원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육 공동체 형성
 - * (예) 학교 음악수업 → 문화예술회관 오케스트라 체험 ; 학교 미술수업 → 미술관 큐레이터 체험 ; 학교 국어수업 → 도서관 스토리텔링 창작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2 지역 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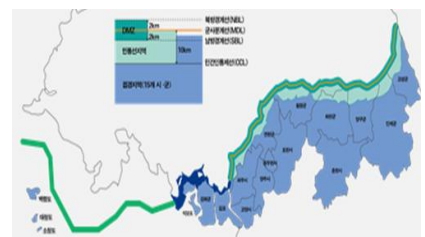
3 인문·평생교육과 연계한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

[사례] 독일 시민대학(Volkschule)

- **(인문·예술 융합 평생배움터) 생애주기별 인문·문화예술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HECA(Humanities & Culture-Arts)’ **통합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지식과 감성, 이성과 감성의 균형잡힌 교육 제공
 -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생애 학습권 보장 및 세대간 소통·이해 증진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대학 등)과 문화시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문·예술 융합 교육의 접근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 HECA모델 : Humanities(인문학)+Culture-Arts(문화예술)을 의미하며,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적 사유와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적 표현을 통합한 교육 접근법

4 접경지역 평화문화 사업 활성화

- **(접경지역 평화문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과 차별되는 접경지역과 DMZ 평화문화예술사업 구성
- **(접경지역의 문화유산화)** 접경지역의 공간 경험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화 추진
- **(접경지역의 예술무대화)** 장소의 의미를 경험하고 내재화 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예술을 DMZ에 설치하는 등 DMZ가 평화의 가치를 경험하고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예술 기반 정책적 중장기 방안 모색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3 AI 대전환(AX)을 통한 문화시설 등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확장

- 문화시설의 양적 확충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시설의 역할 재정의 및 질적 전환 요구 증대 [사례] 핀란드 오디(Oodi) 중앙도서관
- AI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문화 향유 공간'에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혁신'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

1 빅데이터·AI와 연계한 스마트 문화시설 및 콘텐츠 구축

- AI 기반 맞춤형 큐레이션 및 안내 시스템 도입
- (가칭) '지역문화 AI 데이터댐' 구축 및 활용
- 지역특화 AI 서비스 개발 (예) 문화시설 내 '생성형 AI 창작 아틀리에', '우리 동네 역사 챗봇'
-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및 정책 수립 지원 (예) 방문객 데이터와 통신·소비 데이터를 결합

2 AI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강화

- (교육) 전 세대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허브 구축
- (복지) AI를 활용한 '찾아가는 도서관'과 '머무는 도서관' 기능 강화
- (문화/공동체) '주제 특화 커뮤니티' 활성화

3 AI를 활용한 질 높은 실감형·몰입형 지역 콘텐츠의 창·제작 지원

- (가칭) '지역 AI 실감콘텐츠 창작 랩' 조성 및 운영 : 지역 대학, 테크노파크 등 연계
- '문화자원 원본-콘텐츠화' 전주기 지원 : 3D 데이터 에셋으로 구축,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공모·지원
- 지역 문화시설의 실감 콘텐츠 테스트베드 및 확산 플랫폼화 : '창작 랩' 제작 우수 콘텐츠를 시설 내 시범 전시, 피드백 기반 완성도 제고 등 통해 유통·확산 지원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3 AI 대전환(AX)을 통한 문화시설 등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확장

4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민관협력 운영모델 발굴 및 확산

- (가칭) '문화시설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모델 도입
 - 공공은 핵심 자산(공간, 데이터 API 등)을 플랫폼으로 제공, 민간은 이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운영 (예시: 싱가포르 GovTech 모델)
 - (역할 분담) (공공) 인프라 제공, 공공성 관리 / (민간) AI기반 서비스 기획·운영, 수익 창출 및 재투자
 - 시민자산화(Community Asset Trust) 모델 : 시민들이 기금 출자, 멤버십 등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자산을 공유하는 모델 시범사업 추진
- '지역문화 AI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허브' 기능 강화
 - (창업 지원) 유희 공간을 AI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게 제공하고,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판로 지원) 시설 내 아트숍, 카페 등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고 지역 축제·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 지원
- 민관협력 운영모델 유형화 및 확산
 - ①기술기업 협력형(AI·실감기술) ②로컬콘텐츠 연계형(지역 브랜드) ③사회적가치 창출형(사회적기업) ④민간투자 유치형(수익시설)

5 AI 기반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전환 및 고도화

- AI 기반 관람객 초개인화 서비스(Hyper-Personalization) 도입
- AI를 활용한 소장품 관리 및 아카이빙 혁신
- AI 기반 창의적 전시 기획 및 '에듀큐레이션(Edu-curation)' 실현
-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AI 격차 해소 및 네트워크 구축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4 지역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디지털·AI 격차 해소와 윤리규범 확대

- ▶ 디지털·AI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 교육 수준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AI 격차'를 형성하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 ▶ AI·미디어를 단순한 기술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시민이 AI 시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가 AI·미디어를 창의적인 문화 활동과 사회 혁신의 도구로 삼는 문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

1 문화격차 해소 및 시민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 AI·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수립

[사례] 미국 시애틀시 '디지털 형평성 이니셔티브'를 통한 공동체 지원 모델

- (AI·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수립 의무화) AI·미디어 문화 격차 기준 마련, 정책 컨설팅단 운영지원, 시민공론장 개최

2 지역·시민·공동체에서 시작하는 디지털 시민성 문화예술교육 전방위 확대

- (AI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역할을 '세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정
- (비판적·창의적 교육 모델 도입)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교육에 적용,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창작·실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교육 모델을 도입
 - AI·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시민 창작자(Reflective Creator)'로 성장하도록 지원
-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전문교육자 양성체계 구축

3 지역미디어센터, 도서관, 생활문화기반 시설 등과 연계한 주민 생활권 단위 AI 창작·리터러시 센터 운영

- (생활권 단위 창작 거점 기반 조성)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AI 기술을 창작의 도구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미디어센터,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가칭)시민 AI 창작·리터러시 센터(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 체계적인 창작·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시민 참여 및 성과 확산 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연계

4 AI·미디어 창작리터러시 플랫폼으로 광역/기초 단위 미디어센터 역할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지역미디어센터를 AI 시대의 문화적 소통, 창의적 실험, 비판적 공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미래형 문화기반시설'로 그 위상과 역할을 법제적으로 재정립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4 지역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디지털·AI 격차 해소와 윤리규범 확대

5 지역문화 관련 기관/활동 등에 '혐오·차별 표현 방지 가이드라인' 전면 도입

- (혐오·차별 표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과 현실 공간에서 급증하는 혐오와 차별이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활동에 '혐오·차별 표현 방지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 (공공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현장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적용을 의무화
- (시민 주도의 감시 및 공론장 체계 구축) 정책이 행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자정 능력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시민 참여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가칭)지역문화 혐오·차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원
-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가이드라인 도입이 처벌이나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인식개선과 성숙한 발전 계기가 되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

[사례]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의 평등·다양성·포용(EDI) 정책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는 '평등, 다양성, 포용(EDI)'을 필수적인 핵심 펀딩 기준(Core Funding Criteria) 중 하나로 규정하고, 모든 기금 지원 활동에 적용함. 이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기관의 핵심 책무로 삼는 강력한 정책 모델
- EDI 계획서 제출 의무화
- 법적 책무 및 포괄적 범위 설정: 영국의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에 명시된 9가지 보호 대상(나이, 장애,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책무를 모든 지원 단체와 공유
- 조직 운영 전반에 EDI 적용

출처: Creative Scotland Funding Criteria: 3. Equalities, Diversity and Inclusion (EDI) (Creative Scotland, 2021/2022)

III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5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기후 실천 프로젝트

1 재난·재해지역 회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 강화

[사례] 호주 블랙섬머(Black Summer) 산불 대응 관련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분야의 피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및 지역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확대
- 자연환경을 고려한 생태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 재해로 발생한 빈터·공간의 문화적 재구성
- 재난 회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 강화 및 참여형 예술치유 확대 : 재해문화예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재해지역 예술치유센터 마련 등
- 문화예술인·단체 재난지원금 등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지원 (가칭) 문화예술인·단체재난지원금' 지원, 지역 예술가·교사·보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회복 치료사 양성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친환경 문화축제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및 재할용 전문 플랫폼 구축

- 친환경 문화축제, 행사를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및 시범사업 지원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 친환경 축제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무대, 홍보물 제작 교육워크숍도 지원
- 지역 내 문화예술 물품 재사용 및 재할용 전문 플랫폼 구축 [사례] 파주 국립극장 무대예술자원센터, 서울시 리스테이지 서울

3 기후실천 예술 프로젝트 지원

- 기후실천 예술 프로젝트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문화로 채우는 차없는 도시 지원

4 문화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에서 '장소 중심'으로 안전관리 법제·매뉴얼 개선

- (장소 중심 안전관리 법제 및 매뉴얼 마련) 공연장 등 '시설'보다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문제 예방 및 대응 방안 모색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 사건, 2024년 '보일러룸 서울 2024 콘서트' 사태, 성수동 프라다 포토월 행사의 조기종료 등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1 지역문화의 체인저(Changer),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 명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범주 구체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체계적 발굴, 양성,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제도적 개념과 범주, 유형,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화·명확화 (연구 추진 및 법률 개정)
(현행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호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융합형 문화전문인력 발굴 지원) 교육·환경·인권·복지·보건·경제·여가 등과 융합된 새로운 문화직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제도적 지원방안 도출
- (지역문화전문인력 직종의 제도화) 문화기획자 등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에 반영 추진
- 지역문화기획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공공사업 기획비 적정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안전망 편입 및 권익 보호 :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제회 설립 검토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1 지역문화의 체인저(Changer),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2 지역문화PD와 문화이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 **[(가칭)지역문화PD의 선발·배치]**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주민 기반 로컬문화사업 모델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지역문화PD'를 선발하여 각 지역에 배치 **[사례] 관광두레PD**
 - 시·군·구 단위 선발(기초지자체와 지원PD 공동신청), 월 단위 활동비 지급, '지역문화PD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과정 의무 이수
 - (역할) 지역주민과 주요 지역기관·단체의 수요 파악, 문화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와 지역 예술인·단체와의 연결, 매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활동, 문화치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기획·실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민사업체 발굴 및 조력자 역할 수행,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사업체 창업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 (목표) 기초 단위 청년문화일자리의 부족 및 지역정착형 활동 생태계 미흡으로 인한 지역 간 문화인력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밀착 및 일 경험 축적이 가능한 문화일자리 창출
 - (지자체 역할) 지역문화PD와 주민들의 모임 및 회의공간(지역문화 라운지) 의무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 행정·재정적 협력
 - **[(가칭)로컬문화사업체 창업·육성 사업과 연계 추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사업(문화공간 운영, 문화연계 F&B 사업, 로컬굿즈 제작, 문화돌봄, 문화치유, 예술관광 및 문화관광 서비스 제공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지역주민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대상 주민사업체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지원)
- **[(가칭)읍·면 문화이장 선발]** 문화예술인·단체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활동가이자 문화활동 매개자인 '문화이장'을 선발·배치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현안의 문화적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이장 배치 및 지원]**
 - (역할) 공적 기관과 문화예술단체 중심의 기존 전달체계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전달체계로 전환, 마을 내 문화기획 및 문화돌봄 기획·지원
 - (지역) 1단계 인구감소 읍면(읍 290, 면 1,294), 2단계 읍면동 전체로 확대
 - (문화이장의 날 개최) 문화이장이라는 전문적 문화매개인력의 위상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이장의 날 행사 개최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1 지역문화의 체인저(Changer),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2 지역문화예술대학과 연계한 지역문화전문가 과정 개설 지원

- **(지역대학의 지역문화전문가 양성 과정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듈 중에서 각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개설한 커리큘럼 개발과 지역문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5대 유형 : 로컬 아카이빙형, 인사이트형, 큐레이팅형, 크리에이팅형, 브랜딩형 / 3대 목표 : 문화소양형, 문제해결형, 취창업형
- **(지역특성화 대학원 지원)** 인력양성 교육과정 모듈에 의거하여,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커리큘럼(5개 과목 이내)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개설 지원 (1년 이상, 최소 9학점/135시수 이상), 지역문화기관/시설과 연계 운영(실습 등)

3 지역문화예술대학과 연계한 지역문제해결형 문화프로젝트 및 창업 지원

- 지역의 인문계열 및 예술분야 대학(원)과 연계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수익모델을 발전시킨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청년의 역량제고와 직업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일거리 확대 유도

4 창조적 공동체 돌봄 전문인력 등 융합형 문화인력 양성 지원

[사례] 영국의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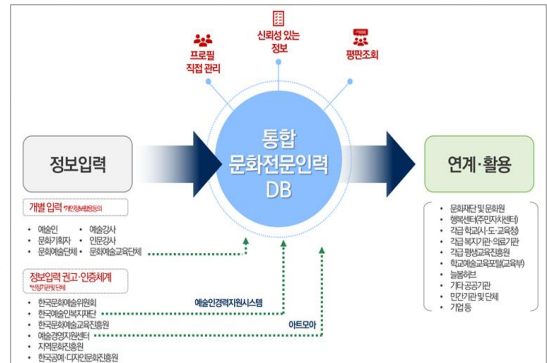
- **(문화융합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지원)** 문화치유 매개자나 문화돌봄 매개인력, 접근성 매니저, 문화권리사 등 문화융합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관련 분야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전문가 육성
-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장애인의 예술 참여·향유활동을 함께하는 매개인력의 체계적 양성(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접근성 매니저,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인력,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인력
-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지원)** 접근성 매니저를 포함한 매개인력이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2 지역문화인력의 일경험 확대 및 성장경로 지원

1 (가칭) 문화인력뱅크 시스템으로 경력관리와 일거리 매칭

- **(문화인력뱅크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인력데이터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통합문화전문인력DB : (가칭) 문화인력뱅크시스템' 구축
- 예술인, 예술강사, 문화기획자, 인문강사,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DB에 직접 정보를 개별입력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사업경력·역량 인증 체계 구축)** 전문인력이 본인의 경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정보의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 연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수혜 여부에 대한 인증 기능 수록
- **(수요-공급 매칭 큐레이션 서비스)** 장기적으로시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 큐레이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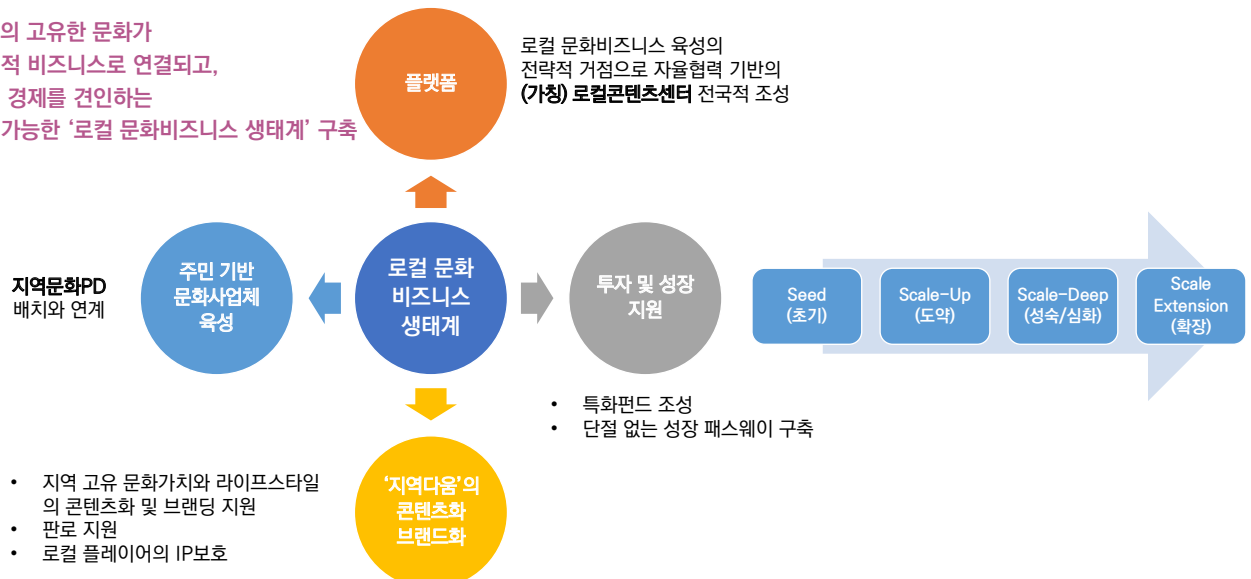
2 지역문화전문인력 재교육시스템 구축

- **(융합적 역량 강화 재교육)** 지역문화전문인력 재교육을 타부처 공공사업과 직접 연결하는 '계약형 현장실습-일거리 매칭' 모델로 지역문화인력의 융합적 역량 강화를 통한 일거리 연계 확대
- **(로컬커넥터 양성)** 소통·매개·조정 역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로컬 커넥터(지역문화연결가)' 양성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 랩 운영
- **(상시 재교육플랫폼 구축)** 상설·맞춤형·상담형 (가칭)지역문화지원센터 운영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3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 로컬의 고유한 문화가
자생적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3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1 로컬문화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가칭) 로컬콘텐츠센터의 전국적 조성 [사례] 덴마크 코펜하겐 SPACE10, 프랑스 제3의 장소(Tiers Lieux)

-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조합이 가능하도록 '(가칭)로컬콘텐츠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공적 기금과 민간 투자를 유연하게 연계하고 자립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육성
- (기능) 라이프스타일 산업인 **衣(패션), 食(푸드), 住(건축), 樂(여행/여가)**에 해당하는 로컬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의 비즈니스로 육성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지역 고유의 자연, 기후, 특산물, 생활문화를 현재에 맞는 기술로 재해석 또는 재창조 하는 도시 문화콘텐츠 제작소
 - (PaaS 모델 도입) 문화시설을 단순 공간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형 플랫폼(PaaS)'으로 전환. 공공은 공간, 데이터 API 등 핵심 자산을 제공하고, 민간(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은 이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운영. (사례: 싱가포르 GovTech)
 - (메이커스페이스 기능) 지역 대학, 장인, 청년 창작자가 협업하는 기술·디자인 융합 공간으로 운영. (사례: 홍성 홍동마을 '풀무학교', 덴마크 SPACE10)
 - (리빙랩(Living Lab) 거점) 주민, 전문가, 기업이 함께 지역 의제(빈집 활용, 쓰레기 문제 등)를 발굴하고 문화적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거점 역할 수행

2 주민 기반 문화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

-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문화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 지원
- 선발된 지역문화PD와 호흡을 맞춰 최장 5년간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사업체로 성장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역량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 및 세무 지원 등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금 내에서 지원

예비단계	초기단계	예비단계
최대 1500만원	최대 1500만원	최대 1500만원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3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3 지역 고유 문화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콘텐츠화 및 브랜딩 지원 [사례] 대전 성심당, 군산 술먹는 마을, 광주 양림 골목 비엔날레

- 로컬문화비즈니스에서 '문화'의 범위를 라이프스타일, 산업,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주민, 관광객, 구매자 등 다각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이 실질적인 일자리와 로컬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다움의 재발견 및 브랜딩)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현대적 맥락에서 발굴하고 브랜딩화
- (세대 교차형 지역 문화기업 창출) 장인-청년 협업 프로젝트로 장인의 기술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융합한 지역 콘텐츠 사업화
- (지역문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지역 문화기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업 스쿨 운영, 협업 모델을 위한 기업 육성 멘토링 확대
- (지역문화 비즈니스 판로지원) 문화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연계 확대지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기념품 시장, 우선구매제도 연계 등)
- (IP 보호) 로컬 플레이어 IP 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약제도 도입(가칭 지역문화IP 보호 상생협약 모델 도입)

4 로컬문화비즈니스 투자 촉진을 위한 특화펀드 조성

- 공공재원(마중물)과 민간자본(참여확대)을 결합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문화기업의 성장 지원
- 단순 후원·기부 연계를 넘어, 성장과 회수를 통한 수익의 지역 재투자를 지향하는 투자 모델, 사회적 가치(지역 활성화)와 경제적 가치(수익 창출)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 모델

5 지역문화비즈니스 성장 경로(Pathway) 지원

- 지역 문화기업이 성장 과정의 단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지속가능 성장 경로(Pathway) 구축을 목표
- 단계별 정책 패키지를 통합하여 Seed → Scale-up → Scale Deep → Scale Extension의 4단계 지원체계를 마련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4 AI 시대, 지역의 기억과 서사의 보존

1 '제땅말' 보존 및 육성기반 마련과 AI 학습데이터 구축

- **(제땅말 보존 프로젝트)**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담고 있는 **지역어, 사투리, 민족어, 고어** 등을 보존하고 육성
 - 보존·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 조례 제정 확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지역어 말뭉치 확대 및 AI데이터 구축

2 자국 인공지능(Sovereign AI) 전략과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례] 유럽연합(EU)의 AI4Culture 플랫폼

- **(지역문화자원 AI학습데이터화 및 개방)**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AI 경쟁력의 원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K-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지역문화자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개방
- **(AI 기반 신산업 및 주민 문화향유 지원)** 구축된 데이터셋과 5종의 API를 민간에 제공하여 AI 문화관광해설,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3 소멸 위험 마을문화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사례] 김해 <자연마을 기록화 사업>, 의정부 <기억저장소>, 해남 <해남花페스타>

- **(소멸위험 마을문화의 기록 및 자산화)** 소멸위험 마을문화에 관하여 사라지지 않게 기록하고, 끊기지 않게 전승하기 위한 기록 및 자산화 사업을 추진
 - 지역아키비스트를 선발·지원하여 구술채록을 통한 지역 서사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전시, 연극, 영상 등 지역민 문화정체성 고취 문화콘텐츠로 개발 (예) 마을만의 고유한 생활의례·구술·방언·공예·민요·농·어·임업 지식, 마을축제·장터, 옛 건물·터·길 등 유·무형 통합
- **'마을기억 저장 시스템 및 AI학습데이터셋 구축', '마을문화축제 개최' 지원을 통해** 소멸하는 마을문화 보존과 지역정체성 계승, 생활인구 유입

4 AI와 연계한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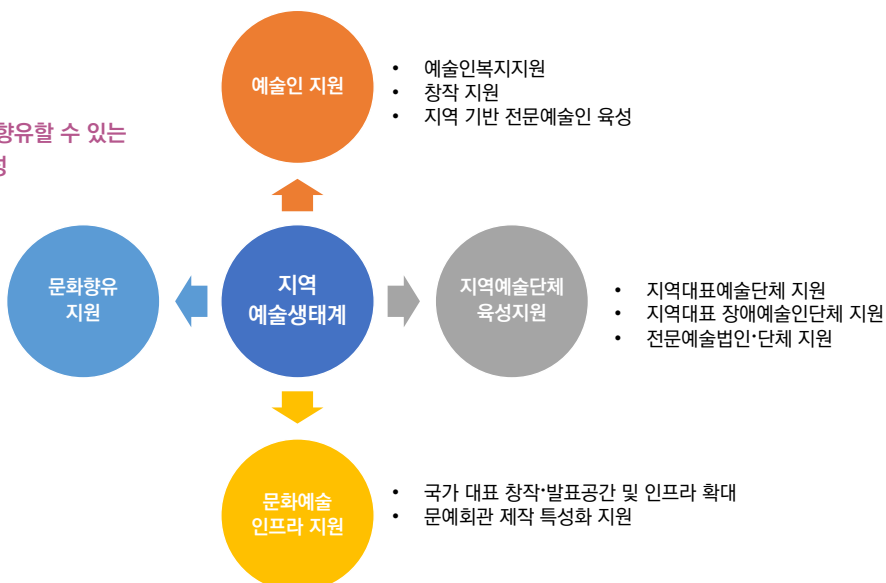
- **(지역학 거점 및 문화아카이브 관리체계 구축)**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는 관리체계 마련, 지방문화원을 지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N문화 포털 활성화
- **(초광역권 지역문화공생 사업)** 지역 간 문화자원의 상호 교류·공유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권역 공동 정체성과 확장된 문화생태계를 구축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5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 ✓ 지역의 고유한 색깔을 담은 예술 콘텐츠가 창·제작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형성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통합문화이용권 규모 확대
- 청년문화패스 확대
- 지역 예술장터 활성화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5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1 촘촘한 예술인 복지 제공으로 지역예술 창작여건 개선

- 예술인 융자 및 노후퇴직연금 등을 위한 복지금고 조성,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임대주택·자녀돌봄확충 등 예술인 생활 서비스 강화
-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기준 마련 등 계약 관계 개선
- 청년 창작예술인 지원으로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예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 지원

2 지역 기반 전문예술인 양성 및 활동 지원

※ 지역별 수요 고려하여 추진

- (지역 기반 전문예술인 육성) 지역대학 예술학과 폐교로 인해 지역의 신진 예술인이 급감하고, 지역 내 예술인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예술인 등을 '지역 기반 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운영 : 전환 교육-현장 실습-자격 인증-일거리 연결
- (생활예술인·청년·경력단절 예술인의 지역 기반 전문예술인으로의 전환 지원): "생활예술인에서 지역 전문예술인으로, 취미에서 생업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예술인 쿼터제) 지역 기반 예술인에게 사업이나 시설 이용 시 일정 비율(Quota) 할당하는 이른바 '지역예술인 쿼터제' 도입 추진

3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 (제작극장화) 예술의전당 및 주요 지역 공공극장의 제작 특성화 유도를 통해 지역 문예회관을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으로 육성
 - (예) 정선아리랑센터 뮤지컬 <아리아라리>,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등
 - [사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5 건강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4 지역예술단체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개선
- 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개선
- 지역대표 장애예술단체 육성

5 중앙-지역 협력을 통한 예술 인프라 조성·운영 확대

- 국가 대표 창작공간 및 인프라 확대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국립공연예술센터, 정동극장 재건축 등
- 지역예술단체와 연계한 프로덕션 형태의 국립예술단체 지정제 도입 검토
- (아레나 공연장 조성 및 운영) K-컬처·관광·스포츠가 결합되는 공연형 아레나 건립(5만석 규모)

6 지역주민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향유 여건 형성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통합문화이용권 규모 확대
- 청년문화패스 확대
- 지역 예술장터 활성화

IV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6 로컬에서 글로벌로, 지역문화 무대의 확장

1 지역대표 문화자원의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지원

- **(로컬100 플러스: K-Glocal Culture 선정)** '로컬 100' 중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자원을 'K-글로벌 컬처(K-Glocal Culture)'로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 **(지역문화 100년)** 근대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이상된 문화자원·축제·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브랜딩, 홍보지원, 글로벌 콘텐츠화 및 관광자원화 지원

2 해외문화원 등 국외 단체 연계 해외진출 및 프로모션 촉진

- **(지역문화 국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성(Globality)을 갖는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선발하여 해외문화원·주재공관·현지 문화기관·해외 한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국외로 진출시키는 지속 가능한 수출·교류 체계를 구축
- **(K-Local Culture Global Seasons)** 해외문화원 및 해외한인 단체 연계 연차별로 선정된 지자체 이름을 내건 "K-Local Culture: 000 지역" 복합 행사
- **(지역 대표공연의 월드투어)** 지역의 대표공연·전통예술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공연장·해외문화원·한인 네트워크와 공동 호스팅해 해외 도시 순회공연을 추진

3 지역 단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사례] 충주문화관광재단 <한영 문화도시 교류 세미나>, 부산시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기반의 교류로 질적 심화 요구
- 지역의 문화자원을 국제 교류용 콘텐츠로 발굴·기획하고, 해외 시각을 통해 재해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육성 (예: 국제공동창작 레지던시)
- 온오프라인 플랫폼 다각화, 지역 국제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양성 및 파견, 글로벌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4 국외 문화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글로벌 콘텐츠 협업 지원

- **(문화예술형 위케이션 비자 도입 검토)** 유연한 거주-창작-근로형 제도 [참고] 법무부의 디지털 노마드(위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2023)
- **(글로벌 콘텐츠 협업 제작 지원)** 국내 체류 국외 문화예술인과 국내 문화예술인과 협업 지원
- 글로벌 문화자유지구 Global Culture Free Zone 지정 추진 검토 [사례]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지구 : 극장세금혜택(TTR)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5), 문화한국 2035.

정소양 외. (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지방시대위원회(2025),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

행정안전부(2025),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본 자료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제언”

이재민 |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박철희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신재민 |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노재정 | 문화예술교육연구소 ACE VENTURA 대표

이영주 |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순석 |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제3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강원·충청권)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문화정책)

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세종학)

이재민

1. 들어가면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논의는 지역문화정책이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지역의 현실과 행정 구조를 기반으로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행정기능과 도시성장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국립박물관단지의 조성, 지역학 연구 기반 등 새로운 문화정책 실험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방향안에서는 〈지속가능성, 다양성, 자율성, 협력, 문화생태계, 문화도시, 포용, 성장, 상생, 연계·소통〉 등이 핵심 가치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문화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가치는 세종시가 지난 10년 동안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에서 지향해 온 방향성과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입니다. 세종시는 생활권 단위 행정체계,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3차 계획이 요구하는 구조적·전략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3차 기본계획 방향안의 근거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도시 특성과 정책 여건을 중심에 두어 어떠한 방향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

3차 기본계획 방향안은 2차 계획의 성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와 기반 조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문화 생태계의 미흡함, 지역 간 격차 지속, 거버넌스 제도화 부족, 재정 확보 어려움 등이 명확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 지점은 세종시의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종시는 빠른 속도로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운영 인력·프로그램·전문성 강화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은 확대되었으나, 이를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생활권 단위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음에도, 생활문화·지역예술·교육·기록·아카이브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구조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차 계획 방향안에서 언급된 ‘재정 확충(60.7%)’, ‘역할 분담 재정립(51.4%)’, ‘협력체계 강화(47.1%)’요구는 세종시의 현실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행정수도 기능을 지닌 세종시는 중앙-광역-기초의 문화정책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구조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구조적 변화 과제를 실제로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가 논의해야 할 지점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방향안은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습니다. 다만 계획안의 여러 지점을 살펴보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중앙 단위의 계획이다 보니 이 같은 여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보니 몇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로컬리티에 대한 접근이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 옵니다. 지역마다 역사적 조건과 정체성의 형성 단계가 다른데, 로컬리티가 생활문화, 지역정체성, 문화콘텐츠 생산, 기록·아카이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 방점을 두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처럼 도시 형성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나 신도시에서는 로컬리티의 의미가 기존 도시와는 크게 다를 수 있기에 이 개념을 어떻게 지역 유형별로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자치 역시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전국의 문화자치 기반은 매우 불균등하며, 지역마다 문화도시 추진 경험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문화도시의 유형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1기 법정 문화도시의 경우에는 공론장 활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방점이 있었던 반면,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경우에는 자산화와 관련된 부분에 방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연유로 인해 일부 지역은 시민참여와 자치 기반이 어느 정도 쌓였지만, 다른 어떤 지역은 도시 차원의 정체성 전략이나 특정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자치를 전국 공통의 단일한 정책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혹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는 보다 다층적인 모델이 필요

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초광역 전략에서도 검토할 지점이 있습니다. 계획안은 광역지자체 중심의 초광역 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생활권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도시권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활권 안에 여러 행정단위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에서는 초광역 전략이 단순히 광역 단위 협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광역이 행정 중심의 접근인지, 혹은 생활권 중심의 접근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책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간전략 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개선이나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도시 구조가 각기 다른 지역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획도시와 기존도시가 결합된 지역, 다핵 구조의 도시, 급격한 인구이동을 경험하는 도시 등에서는 문화공간의 배치와 활용 방식이 일반 도시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전략은 도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접근성 목표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진단에서도 신도시형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도시의 역사적 시간이 짧고,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빠르게 유입되며, 도시 기반시설이 짧은 기간 내에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생태계 정의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도시형 또는 성장도시형 생태계에 대한 별도의 정책 진단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로컬리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지역학, 기록, 아카이브 정책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록과 아카이브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핵심 요소인데, 계획안에서는 이 영역이 다소 보조적인 수준처럼 보입니다. 특히 도시 역사 형성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초기 기록축적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획안은 역할 분담 재정립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의 실제 행정 구조는 점점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기능과 광역 기능, 기초 행정기능이 한 도시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복합도시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이 기존의 단일한 틀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 유형의 변화와 행정구조의 복합성을 고려한 역할 재정립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나오면서

마무리하자면,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매우 다양한 조건과 도시 유형, 그리고 행정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논의가 더해질 필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계획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계획이 더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이 처한 맥락과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정책은 결국 지역문화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지역의 관점과 경험이 함께 축적되었을 때 우리 지역문화정책의 방향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방형안에 대한 제언

2025.11.20.

충남연구원 박철희 수석연구위원

- 국가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고민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하였다고 판단됨
- 계획 완성도, 실천성과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차원에서 다음 몇가지를 제언

1 환경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고민

- STEEP에 따른 환경변화와 영향, 대응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으나, 다음 측면에서 대한 대응방향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함

□ 사회적 측면

- 지역소멸 관련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편적, 사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아카이브는 구축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질적 한계로 콘텐츠화와 활용에 한계
 - ⇒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인력양성 지원사업 필요
- 이주배경주민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방안 고민 필요
 - ⇒ 지역에서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 충남의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산)다문화특화거리 조성(예정)과 함께 돌봄케어를 연계하고 있음

□ 환경적 측면

- 기후위기 심화 보다 지속가능 문화경영적 관점에서 환경(오염)에 어떻게 문화정책이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2 비전과 목표

- 현재 제시한 비전(안)인 “**함께 만드는 문화, 함께 커가는 지역**” 이 수요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다양성, 자율성, 협력, 문화생태계에 대한 내용 중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이 좀 더 연상되었으면 함
 - 협력, 자율성, 성장·발전 등의 키워드는 잘 반영되었지만 지향해야 할 가치로 높게 조사된 **지속가능성(69.4%)**, **지역문화생태계 구축(63.2%)**은 연상을 하는데 약하다고 판단됨
- 목표와 추진전략의 관계에서 목표로 제시된 관람률(다양성 사회,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정주환경 만족도(균형성장과 공간전략 재구축) , 문화재정(문화자치), 접근성(균형성장과 공간전략 재구축) 등은 전략과의 연계성이 보이지만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목표로 제시한 문화예술시설 접근성(24년 15.2분 → 30년 13분)은 수단(차량, 도보 등), 지역(광역시도, 광역시)에 따른 차이가 있기때문에 명확화가 필요함

3 추진과제

- 문화자치와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서 **지역예술인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고** 판단됨. 광역시도 단위의 예술단 역할기능 확대 및 특화가 요구되며, 지역예술인의 창작권, 활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예술인 쿼터제 등의 고민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광역시도별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초정보 (예술인 소득, 창작활동/공간 등) 공유 필요

- 지역문화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역 전체 재정에서 문화예술부분의 재정을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 검토
 -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정* 비율 24년 1.8% → 30년 1.9%에서 순수 문화예술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 문화재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체육, 관광, 유산 등
- 문화지구 부분은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 필요
 - 문화(예술, 특화)지구,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의 문화거리와의 차별성 예:(전통)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관광거리 등
- 문화올 담은 산업단지 조성 확대 추진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 검토
 - 예: 창조산업단지 - 예술활동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이 복합된 단지 개념을 도입하는 것 제안, 광역 시·도별로 1개씩 조성하고 테마화 네트워크화, K-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베이스로 활용

4 추진과제 실행에 대해

☐ 실행과제 실천방향에 대해 제시 필요

- 정책과제 속성 상 과제별로 세부적인 실천방향에 대해 제시는 어렵다 할지라도 과제별 중앙정부 주도형,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형, 지자체 주도형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주었으면 함

충주문화도시 신재민

변화하는 도시와 지역문화의 현주소

지역문화정책은 지난 20년간 도시 활성화의 촉매제이자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도시 발전의 핵심에 위치해 왔다. 쇠퇴한 공간을 일상생활의 장소로 재편성하고, 주민 개개인의 문화예술 경험을 담아내는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계의 복원 과정에서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했으나,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도시와 지역문화를 둘러싼 변화는 매우 빠르고 역동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 도시 공동화 현상, 제조업 중심 기반 산업의 구조적 전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 등은 지방소멸의 위기론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권과 지역 중심의 정책, 기본 소득 등 사회 안전망 확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5극 3특 등의 핵심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는 이제 균등한 기회와 자치권 보장의 틀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면서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내부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충주의 문화도시 사례에서 본 정책의 실제성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의 기간에 충주는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며 문화 생태계의 급성장을 체감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한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충주는 153개의 지역 문화예술 기반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며, 국악 기반의 대형 음악 축제와 수상불꽃극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충북권역의 주요 문화 행사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협업 공연과 '영동 국악 엑스포' 내 단독관을 운영하며, 경북 산불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안동과 함께 문화 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약 7개 사업 분야에서 1,903회차, 2,609시간에 걸쳐 38만여 명과 함께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제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도시의 문화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한 학습과 국제교류를 통해 기존 생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때 가능하였다.

이번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난 1, 2차와의 정책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의 장점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역문화정책의 '함께'라는 가치와 공간 전략의 재구축

함께 만드는 문화, 함께 커가는 지역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바로 '함께'이다. 비전에 두 번 명기된 이 단어는 그동안 '점'으로 인식되던 "문화적 시민"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확장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라는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개념 가치로 '지역문화 생태계, 파트너십, 다양성, 로컬리티'를 설정하고, 실행의 중심가치로 '지속가능성, 자율성, 포용성'을 제시한 것은 지역문화가 단순한 도시재생의 도구적 기능에서 확장되어 도시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포용적 일상의 형성, 경제적 활성화, 지역 문화적 가치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지속가능성'이 지역문화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포괄적 개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적 명확성은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정책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문화공간 전략의 재구축: 디자인스케이프와 장소만들기

기존의 지역문화공간정책이 문화적으로 가시성 높은 공간이나 성공사례를 선별하여 단년도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운영되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거버넌스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스케이프'의 시각적 전략과 '장소만들기(Place making)'의 프로그래밍 및 운영 전략을 융합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동안 각 지원 간 장벽으로 인해 분절되어 있던 휴먼웨어(인적 자원),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하드웨어(시설)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된 문화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씨앗으로부터 성장, 생태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문화 지구 구조는 기존의 일회적 사업 방식을 벗어나 각 읍면동이라는 최소 행정 단위에서도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장소 근원의 문화적 서사와 정체성에 기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선정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 예산제의 일부를 지정 할당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권장된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성장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 관객 기반 정책의 확대

그동안 지역문화정책에서 예술인의 지위는 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했으나, 기초 지자체 행정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와 지역 예술 생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로컬 비즈니스와 예술가 중심의 지원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생산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문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생산 규모의 확대보다는 소비자로서의 '관객' 기반 확대와 심화가 동등하게 중요하다. 시장의 양 축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성장 추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매출 증대와 상업성을 추구하는 마케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관객의 규모 확대, 다양성 증진, 그리고 경험의 질적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기적 정책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달(Reach)'과 '깊이(Depth)'의 균형 있는 추구는 단순 관객 수 증가나 엘리트주의적 심화 추구의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제3차 지역문화시행정책에 대한 제언

광역 문화 거버넌스의 확대와 기초 문화권의 재설정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하는 '5국 3특'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생활권 범위의 광역화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는 역설적으로 정책 집행의 단위를 기초지자체 범위로의 집중이 필요하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광역시도는 광역 중심의 정책 발의를 통해 주요 거점의 문화 공간화, 온라인 플랫폼 개설,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에 반해 제3차 시행정책은 이러한 접근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초지자체별 환경적·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다양성 중심의 정책을 수립한 후, 각 기초지자체와 광역 간의 연계형 협력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즉, 광역은 정책의 방향 제시와 기초 간 조율, 국제교류 등의 전략적 역할에, 기초는 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프로그래밍 실행이라는 차별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 규모별 맞춤형 문화진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인구 규모에 따라 같은 문화 사업이라도 그 효과와 파급력은 현저히 달라진다. 인구 5만, 10만~20만, 30만~50만,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같은 문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문화적 효용과 사회적 파급효과는 상이하게 작동한다. 현행 문화진흥정책은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시행 정책 단계에서는 인구 규모와 도시의 문화기반시설 수준, 관련 전문 조직의 유무에 따라 각 도시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최소 기준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도시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운영 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단계적이고 맞춤형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기 진입 단계부터 과도한 지향점을 설정하기보다는 각 도시의 규모에 부합하는 활동 범위와 필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역 문화재단과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실행은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간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업무 중복과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 문화재단은 광역권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초 재단과 예술단체 간의 정책 수립 및 배분, 정책 간 조율 및 국제교류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반면 기초 문화재단은 시민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래밍 및 정책 실행, 현장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광역이든 기초든 문화재단의 진정한 역할이 위축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배분 기능과 감시 역할에 조직의 대부분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간 업무 중복의 구조적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각 재단이 본연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생활문화 시즌 2의 기초지자체 중심의 정책 확대

현재 지역문화의 중심축은 생활문화정책으로, 시즌 1에서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의 개인적 취향 공동체는 큰 성과를 거두며 다양한 지역 문화프로슈머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술계는 정책 시장 규모를 초과하는 생산자 창출, 전문 예술가와 생활문화 예술가 간의 경계 불명확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시즌 2의 사업 방향성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문화적 시민' 양성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 돌봄의 영역도 개인의 결핍 회복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공공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 간 상호돌봄, 예술 커뮤니티, 생활권 다중이용시설의 공적 활성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충주의 문화도시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의 확대와 심화는 이제 광역권이 아닌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이다. 따라서 생활문화 시즌 2에 대한 예산 배정과 정책 방향성을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검토하며, 지역문화가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었

다. 현장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한편으로는 호감과 신뢰, 애정이 가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과 불신, 불확실성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가는 과정에서, 도시는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과 기초, 정부와 시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갈 때, 지역문화정책은 비로소 지방시대의 확실한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문화가 주도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와 제안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안을 중심으로 -

지역문화기획자 노재정(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처 대표)

- 문화주도의 국가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문화국가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위한 계획
 - 지난 대선 기간 전국의 지역문화기획자들은 이재명대선캠프에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균형성장’으로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와 문화가 주도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제시함
 -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장기적 국가 비전을 문화국가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회복에 집중하지만 이후 장기적 국가비전으로 문화국가를 국가성장 전략으로 문화주도성장이 거론됨
 - 이번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국가로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문화 주도 국가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계획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음
- 지역 균형성장의 정책적 지향으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과 합의의 필요성
 - 지역의 문화 현장은 이미 지난 정부 문화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문화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표 그 자체이자 문화국가로 전환을 위한 유효한 정책적 도구임을 확인하였음
 - 하지만 아직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하며 정부가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도구로 ‘문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대선 기간 만난 정치적 리더들과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는 아직도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 분야와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지향으로 문화의 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문화 주도의 지역 균형성장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 간 협력을 위한 제안
 - 이재명 정부의 5극 3 특대로 대표되는 균형성장 정책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이자 국토 공간의 혁신 정책이며 그 구현에 있어 자치분권과 사회연대경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음
 -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안에도 자치와 공간혁신, 돌봄, AI 전환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돌봄, 기후 영역등은 문화정책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음 것이 현실임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문화현장의 혁신을 위한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성장의 실행 기반인 사회연대경제 정책

과 협력을 위한 과제와 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문화와 다른 정책 간 협력의 필요성〉

‘문화 + 주민자치 협력 = 문화공동체’

문화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으로 세대, 계층,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는 신뢰와 협력의 촉진

‘문화 + 돌봄과 협력 = 문화안전망’

문화가 복지와 결합 될 때, 돌봄은 단지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생활문화 기반의 커뮤니티 돌봄, 세대통합 생활 기반형 문화돌봄 모델은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

‘문화 + 사회연대경제와 협력 = 로컬비즈니스’

문화와 관련된 창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창업의 영역으로 로컬문화콘텐츠, 감성과 라이프스타일 기반 창업, 지역문화기업은 중·소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 물리적 개발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창의력이 주도하는 지역성장이 가능해지며,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발적이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가능

‘문화 + 도시농촌 재생과 협력 = 공간가치 혁신’

문화는 공간에 기억을 입히고,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함, 빈집, 폐교, 폐공장 등은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문화적 공간이 되어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오는 거점으로 공간의 가치 혁신을 가능하게 함

□ 문화주도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기획자 역할 정립과 지원의 필요성

- 문화 주도 지역균형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문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현장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현장을 창의적으로 공진화 시킬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가 요구됨
- 한국의 지역문화기획자는 9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간 지역문화 현장을 지키고 가꾸어 온 중요한 주체임,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역문화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할 자산이기도 함
- 2010년도를 전후하여 지역문화기획자들은 문화정책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지역현장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문화의 가치를 증명하여 왔지만 오히려 문화정책안에서 지역문화기획자는 소외되고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지역 문화기획자는 제도적 기반 없이 열정으로 지역을 지켜왔으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안에 지역문화기획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법적 제

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정책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방향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추진전략(Ⅰ) 문화자치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 중앙-초광역-광역-기초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에 있어 광역의 역할과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면 함 : 중앙정부나 타 광역과의 연결, 기초와의 연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권적 관점에서 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부분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함 : 지역주도의 문화발전을 촉매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함
-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화는 현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라 판단됨 :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다 지정이나 중복적 요소는 없는지 등을 판단해야 함
- 지역문화 재정을 활용함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별 사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도나 시군 차원에서 살펴보면 중복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예산 집행도 타 사업과 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함

○ 추진전략(Ⅱ)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 지역문화 진흥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관점화하는 점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 판단되며, 특히 5극 3특 초광역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지역문화 거점을 다핵화해나가려는 시도가 바람직함 : 다만 기능과 이슈의 개별화에 따라 초광역적 협력력이 전략적으로 변화될 소지를 열어둔다면, 보다 실효성을 가진 공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초광역화의 장점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여 브랜딩의 규모를 키운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점화했으면 함

- 지역 고유의 브랜딩을 위한 로컬씬(Local Scene), 문화경관 만들기를 위해 그 간 축적되어온 지역문화 역량을 다면적·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미래유산의 경우 강원도는 아직 정책적 인식이 확실하지 못하고, 제도적 정착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부문의 인식 변화, 공공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력, 집단, 기술 등의 실제 활용 등이 있어야 함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장소와 공간의 목록화가 필요함 : 상권, 빈집, 폐교, 야간 생활권 모두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곳, 중복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 새롭게 대상화해야 할 곳(역세권) 등을 지역 스스로 발굴하고 문화경관화 해나가야 함
- 로컬문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도시·장소브랜딩의 구체화가 필요함 : 지역문화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이 점차 국가성장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K-콘텐츠가 중앙정부적, 서울집중적인 과포화상태에서 벗어나 한국의 로컬이 가진 지역문화의 매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임(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과정 참조)

○ 추진전략(Ⅲ) 다양성 사회, 공동체의 미래로 확장되는 지역문화

- 생활문화 시즌2 전략을 통해 문화적 시민으로 범주 확장, 생활문화활동 여건 제고, 개인·사회 치유 확대, 동네단위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지역통합돌봄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보다 현실감있는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공공정책사업으로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복지적 목적과 공익증진 목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생활문화의 범주가 다양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공공부문이 당연히 서비스해야 할 의무적 사항으로 보고 수혜자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생활문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감에 인문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것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전 세대에 매우 바람직한 이슈라 판단되며, AI 대전환(AI)을 통한 문화시설 등의 지능형 플랫폼 기능 확장도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전략이라 판단됨
- 다만 지역문화진흥에 관심을 갖는 지역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문학+예술+기술+경영 등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에 목말라 있고 이와 관련된 지역 일자리에 도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통로임 : 통합문화예술교육체계나 AI 대

전환의 문제에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함

○ 추진전략(Ⅳ)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축

- 지역문화PD, 문화이장의 양성과 활동 지원은 이미 타부처에서 추진되었던 사업 인만큼 정책사업으로서의 안전성과 지속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각 사업이 남긴 한계적 요소를 짚어보고 해당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음
- 지역문화예술대학의 지역특성화 대학원 지원은 매우 중요함. 이들이 지역문화진흥의 다양한 이슈들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경험확대, 성장경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가칭) 로컬콘텐츠센터의 전국적 구성에 있어 자립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공적 기금과 민간투자의 유연성 사이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입지는 넓지 않다고 생각함 : 기존 소상공인이나 단체와의 경쟁, 공공목표의 달성, 대안경제적 모델이면서도 수익창출의 요구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을 위한 실현 가능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되기를 바라며

권순석 : 문화컨설팅 바라

Ⅰ. 이야기를 시작하며 : 전환기의 지역문화 정책,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방향(안)은 대한민국 지역문화의 새로운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집행체계'와 '지역 문화전문인력 부족 및 소외',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인구소멸', 'AI 대전환',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확대'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지속가능성'과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그리고 '지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안)의 발전적 측면과 더불어, 계획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Ⅱ. 미리 본 제3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의미

제3차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지역문화 정책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합하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발전적 특징은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를 지향하는 수평적 협력기반의 거버넌스 재정립.

제2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 중앙정부의 하향식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초광역-광역-기초 간 지역문화 진흥 체계 구축'을 통해 다수준, 다주체 사이의 협력적 성과(Collective Impact)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며, 광역은 매개와 조정의 허브 역할을, 기초는 지역 밀착형 생활권 기반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책 주체들이 기본계획의 방향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양방향식 계획 수립과정'을 시도한 것은 과거의 일방적인 전달 체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치 및 영역 확장

제3차 계획(안)은 지역문화 정책의 영역을 인구 변화와 기술 변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첫째,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의 확장입니다. 인구감소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여, 기존 '동호회 중심'을 넘어 '지역공동체' 이슈와 문제들을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립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화계에서 주장하는 정부 문화정책의 사회정책으로의 확대 주장과 맞물려 시의성 있는 방향 제시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 구체적 대응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문화시설을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지역문화AI 데이터댐'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문화가 미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발전적 방향입니다.

3.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다층적·입체적 공간 전략 재구축

'5극3특 초광역 문화진흥체계'를 최상위 권역으로 설정하여 광역권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의 연대와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또다른 중앙-(초)광역-기초의 전달체계나 위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나아가, '문화마을(씨앗)', '문화특화마을(성장)', '문화지구(생태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장인경제(Artisan Economy)'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 주도의 자생적 성장 모델을 구축한 것은 지역 단위의 활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III.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3차 기본계획(안)이 위와 같은 발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메커니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반 혁신(정부실행 로드맵, 인력, 행정)'과 '실행 엔진(자본, 거점, 성장)'으로 구성된 '자생적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 '중앙정부의 5개년 실행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화

'계획'의 '실천'을 담보하는 중앙정부의 이행 책무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계획의 성공은 결국 중앙과 지역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2차 계획의 한계였던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실천 계획(의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먼저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 ① 5개년 자원 투자 계획 명시 : 5년간 투입될 총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명시합니다. 특히 문화분야 '(포괄교부금)'예산 총액을 연차별로 목표를 정하고 사전에 제시하여, 지자체가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장합니다.
- ② 핵심과제 이행 마일스톤(Milestone) 제시 : '문화자원 다각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 'SOP 표준모델' 개발 / '성과 기반 감사 제도' 혁신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의 연차별 이행 일정을 제시합니다.
- ③ 계획서 최종본에는 계획의 내용에 따른 실행 주체가 정부인지 (초)광역인지, 기초인지 민간인지 등을 구체화해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과 정책실행을 위한 실행사업의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제안하고 제도화되고 그 실행주체는 지역(광역이나 기초 혹은 민간)이어야 하는 계획도 있어 보입니다.

[2] 지역문화인력의 '정책 브랜드'를 넘어서 '전문인력'으로의 개념 재정립

'사업 실행 인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직업군'으로의 지역문화 인력 육성 계획(안)의 '전문인력 범주 명확화'라는 중요한 목표가 '문화PD', '문화이장' 등 특정 사업 브랜드'로 축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① 개념의 재정의 : '문화PD', '문화이장' 등은 중앙이 규정하는 '직업'이 아니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예시(브랜드)'중 하나임을 명확히 합니다.
- ② 지원 방식의 전환 : 중앙정부의 지원은 '타이틀' 중심이 아니라, 이들(가칭) 지역문화 전문 매개인력'이라는 '직업군(Profession)' 자체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 ③ 핵심 지원 내용 : '직무 역량 강화', '표준 계약 정립', '공정 기획비 가이드라인 마련', '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편입' 등입니다.

[3] '문화 분야 사회적 성과 파트너십(SOP)' 모델 도입

'정산' 중심의 보조금을 '가치' 중심의 '협약'으로 전면 전환했으면 합니다. 영리, 비영리 문화 영역의 공공예산 의존성과 '용역/보조금' 방식의 한계는 '진정한 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행정적 장벽입니다. 유연한 'SOP(Social Outcomes Partnership)' 모델을 '협약'의 핵심 도구로 도입해야 합니다.

- ① SIB를 넘어 SOP로 : '금융 계약(SIB)' 방식을 넘어서 '가치 파트너십(SOP)'이 문화 분야에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 파트너(문화재단, NPO 등)가 '정산'이 아닌 '공동의 사회(문화)적 목표' (예: 청년 정주율, 문화 향유 격차 해소)에 합의합니다.
- ② 작동 방식 : 정부(지자체)는 이 목표 달성 과정을 예산으로 지원하며, 항목별 정산이 아닌 합의된 '성과(정량+정성)'를 공동 측정·환류합니다.
- ③ 제도 기반 : '(로드맵)'에 따라 중앙정부는 '문화SOP 표준 협약 모델'과 '성과측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SOP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감사'가 아닌 '성과 달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 기반 감사 시스템'을 법제화합니다.

Ⅳ. 결론 : '가치 중심의 협약'과 '자생적 선순환 시스템'을 향해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속가능성'과 '파트너십', '자율성'이라는 문화의 작동 방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적인 청사진이어야 합니다. '협력적 성과'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창조적 공동체 돌봄'으로의 가치 확장, 다층적 공간 전략은 지역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획의 성공은 결국 '실행 주체인 지역의 자율성 보장'과 '정책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①중앙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약속(로드맵)을 기반으로, ②'사람(전문인력)'을 '사업'이 아닌 '직업군'으로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③'행정(보조금)'의 지향을 '가치(SOP 협약)' 중심으로 전환하여, ④'포괄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역이 ⑤'다양한 자원'을 지렛대 삼아 ⑥'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인력들이 ⑦'자생적 활동가, 창업가(스핀오프)'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중앙과 지역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산' 중심의 관리가 아닌 '가치' 중심의 파트너십(SOP)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 해나간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의 자생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MEMO

MEMO

